

2025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연구



진주시의회

제 출 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연구」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25. 11.

■ ○○○○연구회

최민국(대표의원)

○○○(간사)

○○○

○○○

○○○

■ 연구기관

연구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책임연구원 :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연구원 : 유순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연구원 : 최희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2
II.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5
1.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5
2.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6
3.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8
4.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	11
5.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12
6.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16
7.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	17
III.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개요	19
1.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배경	19
2.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른 공공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절차	21
3.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27
1)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기본 정보	27
2)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요 경과	27
3)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관련 언론보도	28
IV.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	30

1. 연구 목적 및 대상	30
2. 표본 규모 및 표본추출방법	30
3. 조사 기간 및 방법	30
4. 설문 구성	30
5. 분석 방법	31

V. 연구의 분석 결과 32

1. 표본의 특성	32
2.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인식 분석	34
1)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지도	37
2)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영향 인식	40
3)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정보접촉 빈도	42
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시민참여 인식 분석	44
1) 진주시의 시민 정책 참여 기회 제공	47
2)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	49
3)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	51
4)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	53
4.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 역할 인식 분석	55
1) 진주시 시민 대상 정보제공	58
2) 진주시 공식 소통 창구 운영	61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64

4)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 마련	67
5.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분석	69
1) 갈등 조정 역할 수행 정도	72
2)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	75
3)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78
4)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	80
6.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 분석	82
1) 이해당사자 상호신뢰	85
2) 소각장 위치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87
7.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 분석	89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92
2)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	94
3) 공식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	96
8.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 분석	98
1)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	102
2) 이해당사자 간 협력 분위기	104
3) 신뢰 기반 소통 및 협의 노력	106
4)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108
9.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공동의사결정 수준 분석	110

1)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	114
2) 공동의사결정 실시	116
3)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	118
4) 정책 결정 책임 공유 노력	120
VI. 지방정부 간 광역 폐기물 처리 협력 성공 사례	122
1.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협력 모델	122
1)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122
2) 광역 협력형 효율화 전략	123
3) 성공적 갈등 해결 과정 분석	124
4)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의 위치 및 조감도 정보	124
5) 재정 분담 구조의 확립	126
6)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	126
7) 김해-진해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 도출	126
2. 김해-진해 사례를 통한 진주시 정책 제안	128
VII. 진주시 거버넌스의 문제점 진단	130
1. 참여 주체별 문제점	130
2. 거버넌스 구조적 한계	131
VIII. 정책적 개선 방안	133
1. 시민참여 확대 방안	133
2. 진주시의 역할 강화 방안	133

3. 진주시의회 기능 강화 방안 135

4.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제안 137

IX. 결론 및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8

·부록(설문지) 152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9
<표 2>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13
<표 3>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25
<표 4> 설문 구성 및 문항 분류	31
<표 5> 표본의 특성(N=295)	33
<표 6>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34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 37	37
<표 8>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인지도	39
<표 9>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영향 인식	41
<표 10>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정보접촉 빈도	43
<표 11>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도	44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시민참여 인식도	46
<표 13> 진주시의 시민 정책 참여 기회 제공	48
<표 14>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	50
<표 15>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	52
<표 16>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	54
<표 17>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 역할 인식	55
<표 18>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 역할 인식도	58
<표 19> 진주시 시민 대상 정보제공	60
<표 20> 진주시 공식 소통 창구 운영	63
<표 2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66
<표 22>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 마련	68

<표 2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69
<표 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의회 역할 인식도	72
<표 25> 갈등 조정 역할 수행 정도	74
<표 26>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	77
<표 27>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79
<표 28>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	81
<표 29>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	82
<표 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신뢰 인식도	84
<표 31> 이해당사자 상호신뢰	86
<표 32> 소각장 위치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88
<표 3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	89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참여수준 인식도	90
<표 35>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93
<표 36>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	95
<표 37> 공식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	97
<표 38>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	98
<표 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협력수준 인식도	100
<표 40>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	103
<표 41> 이해당사자 간 협력 분위기	105
<표 42> 신뢰 기반 소통 및 협의 노력	107
<표 43>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109
<표 44>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공동의사결정 수준	110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공동의사결정 수준 인식도	112
<표 46>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	115

<표 47> 공동의사결정 실시	117
<표 48>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	119
<표 49> 정책 결정 책임 공유 노력	121
<표 50> 추진 경과 및 주요 의사결정과정	124
<표 51> 협력 구조 및 재정 분담	126
<표 52>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기본 방향 및 구조도	138
<표 53>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139

그림 목차

<그림 1> 최근 5년간 일일 폐기물 배출 현황	20
<그림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절차	22
<그림 3>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125

〈요 약 문〉

[연구 배경 및 목적]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설치에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음. 하지만 내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해당 사업은 정책 추진과 주민 수용성 간의 충돌로 갈등이 되고 있음.
- 진주시는 17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하루 28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내동면 매립장 인근에 추진 중임.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장기적 피해를 이유로 시설의 추가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실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행정 절차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진주시의회는 광역화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을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주시의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진주시·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 방법]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95명을 대상으로 2025년 8월18일부터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음. 소각장 설치 사업 인식, 시민참여,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 역할, 이해당사자 간 신뢰·참여·협력·공동의사결정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 조사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아 전체 응답자의 64.8%가 소각장 설치 사업을 잘 모르고 있으며, 54.9%가 관련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65.0%는 소각장 설치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평가]

- 시민참여: 49.2%가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지만 45.7%는 시민참여의 문제해결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참여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10년 미만 거주자가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보다 시민참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장기 거주자의 참여 피로와 불신의 누적이 시사되었음.
- 진주시 역할: 전반적 평가가 평균 2.6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음. 정보제공(53.6% 부족), 공식 소통 창구 운영(44.8% 부족), 의견 수렴 노력(43.4% 보통)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읍면지역(평균 2.89)이 동지역(평균 2.60) 보다 높았으며, 단기 거주자가 장기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음.
- 진주시의회 역할: 평균 2.82점으로 중립적 수준이었음. 갈등 조정(긍정 19.7%), 책임 있는 정책 결정(긍정 19.0%), 시민 의견 반영(긍정 22.7%), 감시 및 견제 기능(긍정 18.6%) 모두에서 낮은 체감도를 보여 핵심 기능의 실질적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해당사자 간 신뢰 · 참여 · 협력 · 공동의사결정 수준]

- 네 가지 핵심 요소 모두 평균 2.80~2.96점으로 중립적 수준에 머물러 협력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음. 신뢰(평균 2.82)와 참여(평균 2.83)는 20~30대와 10년 미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40~50대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협력(평균 2.80)은 정보공유, 협력 분위기, 신뢰 기반 소통, 협력 네트워크 모두에서

중립적 태도가 지배적임. 공동의사결정(평균 2.96)은 합의 도출, 실제 실시, 대안 논의, 책임 공유 등 모두에서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읍면지역과 단기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문제점 진단]

-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시민단체는 참여 수준이 저조, 장기 거주자와 고학력 집단의 참여 피로와 불신이 누적됨,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이 부족함.
- 둘째, 진주시는 정보제공 및 소통 노력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음. 또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환류 체계가 미비함. 행정 주도적 성격으로 실질적 시민참여가 미보장됨.
- 셋째, 진주시의회는 갈등 조정, 시민 의견 반영, 책임성 확보 등 핵심 기능에서 대한 시민 신뢰가 부족하며 의정활동의 가시적 성과와 환류가 미흡함.
-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가 불균형적이며 의사소통 채널은 부족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상황으로 보임.

[정책적 개선 방안]

- 첫째, 시민참여의 확대가 필요: 온라인 플랫폼, 공론화 위원회, 지역별 협의체 등 다층적인 참여 경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례적 회의, 워크숍, 정책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지속적인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함.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과 결과 공유를 통한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둘째, 진주시 역할 강화 필요: 행정정보공개 확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전략 수립, 거버넌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의무화를 조례로 명문화, 협력 거버넌스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투명성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도록 조례 정비.
- 셋째, 진주시의회 기능 강화 필요: 시민 참여형 상설 협의위원회 구성, 의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의 정례화, 주요 정책의 공론화 의무화, 3자 협의 모델(시민단체·시·시의회)확립, 회의록·자료 온라인 공개·실시간 중계, 시민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기능 강화.
- 넷째,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구축: 최상위 협의체인 진주시 협

력 거버넌스 위원회(시민 및 시민단체·진주시·진주시의회가 각 1/3의 균형 비율)구성,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거버넌스 전담 부서 신설,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갖춘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구조 확립.

[벤치마킹: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사례]

-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의 성공 요인은 ① 국·도비 70% 지원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됨, ② 폐기물 처리량 및 비용 분담을 정량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명확한 합의 도출, ③ 행정소송 기각 판결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의 확보, ④ 노후 소각장 폐쇄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진주시의 경우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천·산청·하동 등 광역협력 모델을 재개하여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률 검토를 통하여 예상되는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노후 시설 및 중복시설을 정리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소통이 필요함.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둘러싼 협력 거버넌스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음. 형식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밝혀짐. 이해관계자 간 신뢰·참여·협력·공동의사결정의 수준이 모두 중립에 머물러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정책 정보의 개방성, 투명성 확보, ② 시민참여의 실질적 보장, ③ 세대 및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전략 도입, ④ 협력 거버넌스 기반의 제도적 장치 마련, ⑤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있음.
- 진주시 소각장 갈등은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 간의 신뢰 구축, 실질적 참여, 지속 가능한 협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 본 연구의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향후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I .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진주시, 주민, 진주시의회 간에 일정한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난제이며, 이른바 정책 갈등의 대표적 사례임.
-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의 1순위 후보지로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 중인 진주시 내동면이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2030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진주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음. 그러나 소각장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에 반대하고 진주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반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진주시의 소통부재와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현재의 진주시 통치 방식은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참여 주체들의 참여 수준과 경로는 어떠한가, 이들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와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주요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정도를 분석한 후 참여 주체인 주민, 진주시, 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에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한 과제의 범위는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사례로 거버넌스의 구축 정도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 정도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첫째,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참여도를 분석하였음.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량에 대한 주민인식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시하고자 함. 또한 해당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및 참여 기회 제공 정도 분석함. 시민과 시민단체의 리더십 정도,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의식 정도, 시민과 시민단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능력 등을 분석하였음.

- 둘째, 거버넌스 운영체계에서 진주시의 역할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주시와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거버넌스 참여 주체와의 공식적 채널 확보 및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음. 또한 거버넌스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노력 정도를 분석하였음.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진주시 주도 거버넌스 참여 정도,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지침 제정의 실효성 분석,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 정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셋째, 거버넌스 운영체계에서 진주시의회의 역할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조정하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합의의 형성을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 발휘 정도를 살펴보았음. 또한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정도 분석하였음.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에서 진주시의회의 주민의견 대표 기능 수행 정도, 거버넌스 체계에서 진주시의회의 책임성, 거버넌스 체계에서 진주시의회의 정보 공개성 및 시민 접근성 보장 정도를 분석하였음.
- 넷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정도를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공통요소와 세부적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각각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참여, 협력, 공동결정의 정도 분석하였음. 또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참여 방안 분석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경로 확대 방안 및 참여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시하고자 하였음.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참여 주체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하고자 하였음.

- 다섯째,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특히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모델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략적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하였음.

II.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1.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 거버넌스의 개념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체계, 운영 양식, 주체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 등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강황선, 2003; 이미홍·김두환, 2007).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협력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를 말함(Pierre, 1999; UNDP, 1996; Rhodes, 2000; 강황선, 2003; 사득환, 2007).
- 이러한 거버넌스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척되면서 다차원적으로 등장하는 데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적 거버넌스, 국가적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가 그러한 예임.¹⁾
-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의 하위 갈등 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음(전영평, 2003).
-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세계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 자치가 심화, 확산하면서 중시되는 부분이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

1)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세계체제 수준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환경, 통상, 보건, 문화, 스포츠 등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다루는데,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UN, UNDP, UNESCO, OECD, ILO, WTO, WHO, World Bank, IMF 등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도 다양함. 지역적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는 EU, NAFTA, APEC, ASEM, ASEAN, NATO 등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치, 경제, 군사안보, 문화 등의 거버넌스를 의미함. 지역적인 블록의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안보나 지역 내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적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는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여 접근하는 거버넌스임(최창현·사득환, 2004).

정하겠다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차원에서 지방 정부, 기업 및 NGO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사득환, 2007).

- 우리나라의 경우 로컬 거버넌스는 1990년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류한원, 2010). 분권화의 확대,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성과 대응성, 그리고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화 및 시민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류한원, 2010).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이 증가하고 NGO와 기업들이 지방수준에서 자율성을 지니면서 로컬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하게 확산되고 있음(김석준 외, 2000).
- 로컬 거버넌스는 초기에는 지역사회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역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미래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개념이며, 개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단체나 결사, 그리고 기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전종섭, 2000).

2.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 이는 중앙 정부 중심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함.
- 소순창과 유재원(2005)은 로컬 거버넌스를 지방정부가 갖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현되고, 이해관계집단

의 규모가 보다 한정적이고, 주민이나 NGO단체와의 접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규정함(사득환, 2007).

- 한승준(2004)은 지역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해결이나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이 권한을 공유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는 방안을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였음(양평호, 2018).
- 또한, 미국의 로컬 거버넌스를 깊이 연구한 Box(1998)는 로컬 거버넌스를 ‘시민들, 선출직 대표자들, 공공 전문관리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 Box(1998)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하여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의사결정의 규모로서 그 규모가 최저 단위일수록 거버넌스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이며(Sa and Choi, 2023), 둘째는 민주성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공개적인 기회와 그들을 환영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거버넌스에 충실하는 것임(Sa and Choi, 2023). 셋째는 책임성으로서 시민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며, 넷째는 합리성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참여자들(시민, 선출직대표,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려 깊은 사고를 하며 많은 견해들을 표출시키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정책 과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커뮤니티(policy community) 속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정책과정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음(사득환, 2007).
- 즉, ‘국가를 비롯한 도시정부, 기업, NGO, 일반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 속에서 토론 및 협상과정을 통해 공동

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정치과정' 이라 할 수 있으며(이명석, 2002; Peters, 2000; Stoker, 1998) 주민과 NGO, 기업 및 도시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임.

-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는 지방수준에서의 자원배분, 정책 결정, 서비스 전달에 대한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행위 주체들 간 다양한 관계가 형성됨.
- 또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며, 시민사회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이제학, 2008).
- 로컬 거버넌스는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조직들에 초점을 두고,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며 둘째, 지역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 데 그 중심 목표를 두고 있음(박주현, 2012).
- 즉,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미래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김석준 외, 2000; 황선희, 2009; 박주현, 2012).

3.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 Leach와Percy-Smith(2001)은 로컬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비영리부문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집단적 활동을 통해 공동의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정의함(안태숙, 2011).

- 김용웅(2002)은 지역정책과 사업의 추진에서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방식을 벗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참여자로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시스템이라고 정의함(박주현, 2012).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연구자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L e a c h 와 Percy-Smith (2001)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비영리부문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집단적 활동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김용웅(2001)	지역정책과 사업의 추진에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방식을 벗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참여자로 협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시스템
이현출(2001)	지역사회의 주요 부문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적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의 공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염일열과 설성현 (2003)	현재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만들고, 해결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공공 의사결정 방식
최병대(2003)	중앙정부의 권력이양을 전제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된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거버넌스에 비해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집단의 규모가 보다 한정적이고 주민이나 NGO단체와의 접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초의수(2008)	지역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 간 교류, 협의, 합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추진체계
안태숙(2011)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이나 영역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의사결정의 과정

- 이현출(2001)은 지역사회의 주요 부문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적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함(박주현, 2012).
- 염일열과 설성현(2003)은 현재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만들고, 해결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공공의사결정 방식으로 봄(박주현, 2012).
- 최병대(2003)는 거버넌스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현될 때 이를 로컬 거버넌스라 하며,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주민과 함께 다스림이라고 보았음(양현모 등, 2000). 즉,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에 비해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관계집단의 규모가 보다 한정적이고 주민이나 NGO단체와의 접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으로 보았음(박주현, 2012).
- 초의수(2008)는 지역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 간 교류, 협의, 합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추진체계라고 함(박주현, 2012).
- 안태숙(2011)은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이나 영역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정의함(박주현, 2012).
- 이상과 같이 거버넌스의 축소 개념인 로컬 거버넌스는 행위자의 활동영역 범위가 지역사회임을 알 수 있음(박주현, 2012).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된 로컬 거버넌스를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상호작용, 상호의존하며 협의 과정을 통해 동등한 의사결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함(박주현, 2012).

-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따라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음(주재복과 한부영, 2006).
- 로컬 거버넌스는 중앙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임.

4.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

-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보조성과 특정성을 들 수 있음. 보조성이란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분권화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특정성이란 지역 공동의 목표나 이익이 명확히 설정된다면 공동이익과 관련된 특정 이익집단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김진모, 2009).
- 둘째, 로컬 거버넌스는 민간재가 아니라 공공재와 관련된 개념임. 이는 지방정부는 환경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기도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모든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발상을 지향해야 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 셋째,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와의 구별이 필요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즉 공공부문이 서비스는 제공하되 직접적인 생산 및 전달은 서비스별 수준을 고려하여 공

공부문이 아닌 여러 부문에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거버넌스의 여러 복합적 요소들 중에서 서비스 공급의 실천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사항은 네트워크 중시, 통제 지양과 영향력 확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혼합, 다양한 도구의 활용 등을 들 수 있음(Peters & Pierre, 1998).

- 넷째, 시민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데, 좋은 제도와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 참여의지가 결여될 경우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려움(강인재와 유태현, 2008).
- 마지막으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의 소유의식과 의무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김진동, 2006).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를 정의함에 있어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 단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계 없이 특정한 이익을 매개체로 조직을 구성하는 공동이익적 집단이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강인재와 유태현, 2008).
- 또한 적극적 시민의식 및 공동소유 의식을 바탕으로 개방적 참여체계를 모색하고 지방정부 조직 이외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상호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이를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는 로컬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음.

5.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역시 거버넌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박주현, 2012).
- Stoker(1997)는 거버넌스의 일반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조직 간 네트워크 등을 제시함(박주현, 2012).

- Hilliard와 Kemp(1999)는 거버넌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적 장치로 정부 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육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사회적 주제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정책 형성 및 확립 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초의수, 2008).
- Jessop(2000)은 거버넌스의 조직적 측면을 강조하여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인 복합체제를 강조함(박주현, 2012).
- Lynn et al.(2001)은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형태로 자발성과 협력적 관계에 의해 거버넌스를 규정하였음(박주현, 2012).
- Newman(2001)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가치로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자치, 일반 국민의 참여, 민주성을 제시함(박주현, 2012).

〈표 2〉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로컬거버넌스 구성요소
Stoker(1997)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조직간 네트워크
Hilliard와 Kemp(1999)	정정부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
Jessop(2000)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인 복합체제
Lynn(2001)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형태
Newman(2001)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자치, 일반국민의 참여, 민주성
김정렬(1999)	상호신뢰
박영주(2000)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이병수·김일태(2001)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 대화와 협력, 신뢰, 공동의 문제해결방식
주성수(2001)	민주주의, 정통성,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

이현출(2001)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양식
박희봉(2002)	신뢰와 참여, 수평적 시민단체, 개방형 네트워크, 정책결정의 합의
염일열과 설성현(2003)	공동의사결정의 형태
강황선(2003)	동등한 의사결정권
소순창과 유재원(2005)	정책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관계
김향량(2006)	자발적 참여, 협력, 공동결정
주재복·한부영(2006)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
김인(2006)	자율성 수준, 협력과 조정정도, 네트워크 구축정도
김미경(2008)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
안태숙(2010)	상호의존성,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 국내의 연구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단일차원에서부터 복합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제시함(박주현, 2012).
- 단일차원으로는 상호신뢰(김정렬, 1999),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박영주, 2000), 공동의사결정의 형태(염일열과 설성현, 2003), 동등한 의사결정권(강황선, 2003)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함.
- 2개의 요소 이상인 복합적인 측면으로는 이병수와 김일태(2001)가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대화와 협력, 신뢰, 공동의 문제해결 방식을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함(박주현, 2012). 또한, 이 4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공무원과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두 집단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조건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박주현, 2012).

- 주성수(2001)는 거버넌스의 기본요소로 민주주의, 정통성,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이현출(2001)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양식을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음(박주현, 2012).
- 박희봉(2002)은 신뢰와 참여, 수평적 시민단체와 개방형 네트워크, 정책결정의 합의를 제시하였으며, 최병대(2003)는 시민참여, 사회적 일체감, 참여, 주인의식,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소순창과 유재원(2005)은 정책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관계를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꼽았음(박주현, 2012).
- 이상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는 상호의존성, 자율성, 네트워크, 참여, 협력, 신뢰, 공동의사결정,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등으로 나타남(박주현, 2012). 이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자 로컬 거버넌스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로 혼재되어 있음(박주현, 2012). 더욱이 신뢰, 협력, 네트워크 등은 사회자본을 설명해주는 주요 요소들로 이러한 요소들은 진정한 복지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설명됨(안태숙, 2011).

6.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 첫째, 환경적 조건을 구비해야 함(사득환, 2007). Putnam(1995)은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및 전략 선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였음(사득환, 2007). 사회자본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동·조정 등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사회일수록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음(사득환, 2007). 그 외에는 자원과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들간의 관계, 파트너십 특성, 외부환경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사득환, 2007).²⁾

-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조화(network structuring)가 필수적임.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형성 및 변화시키는 전략이며, 이는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파트너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그들의 관계, 그들의 관계를 가이드하는 규칙들을 고려하는 것임(사득환, 2007). 이는 로컬 거버넌스 대상 정책의 영역,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분담 등 현실적으로 로컬 거버넌스 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 등을 강조하는 입장임(사득환, 2007). Ostrom(1990)은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 이 관건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관리의 주체자,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참여방법, 네트워크 구성형태,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분담문제, 관여 정책분야의 한계 설정, 참여 단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될 수 있음(사득환, 2007).

- 세 번째는 구조화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의 관리에 관한 것임. 구성된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관

2) 자원(resources)은 재정적 자원과 물적자원, 기술과 전문지식, 사람, 조직 집단에 대한 연계, 그리고 정보의 자원도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의 특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파트너들의 이질성과 관여 수준이고,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서로의 신뢰, 존경, 갈등, 및 권한 차별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의 특성으로는 파트너들의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잘 이끄는 리더십과 행정 및 관리, 운영체제, 효율성 등이 중요하고, 외부 환경은 지역 사회가 얼마나 파트너십의 형성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공 및 조직정책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도출 과정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제 조건들을 잘 구비해야 함. 즉, 내부운영의 틀 구성 전략임. 이에는 직접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된 행위자들이 게임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선, 중개, 전략적 합의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의 촉진, 조정과 중재 등이 있음(사득환, 2007).

- 결론적으로 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 외부적인 네트워크 구조화 전략과 내부적인 운영관리 전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요약할 수 있음(최영출, 2004).

7.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

-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
-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통 요소는 참여성(participation),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고 할 수 있음(주재복과 한부영, 2006). 즉 바람직한 거버넌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책과정이 투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행동에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 로컬 거버넌스를 협력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간 관계,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요인, 정보 및 전략의 공유방식, 행위자들의 역할 및 책임의 설정, 의사결정방식, 권한위임방식 등 거버넌스의 구성에 관련된 요인,

그리고 거버넌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내부의 운영 규칙과 관련된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음(주재복과 한부영, 2006).

- 결국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과 규칙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주재복과 한부영, 2006).
 - **(다양한 주체 참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함께 하고,
 - **(협력적 문제 해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의 공공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 **(지방 자치의 강화)** 중앙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참여 민주주의 실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III.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개요

1.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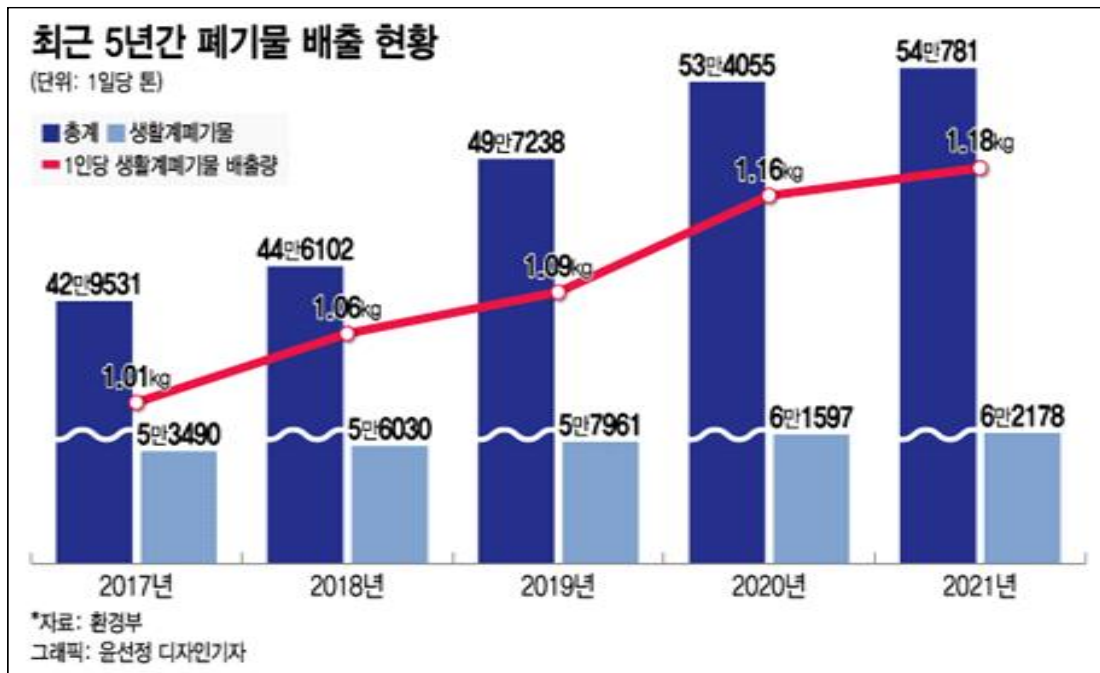
-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생활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도 파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자연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풍요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마음이지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해 크게 자극되어 태동하기 시작하였음(Simon, 1981).
- 즉, 성장 지향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자연 자원이 고갈되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영역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대두됨(사득환, 2021).
-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을 지칭함(사득환, 2021).
-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협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고 있음.³⁾
-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일일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40만1천658만t에서 2019년 49만7천238

3) 2024.3.10. 환경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만t으로 5년 만에 20% 넘게 늘었으며, 2021년에는 54만 781t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전체 폐기물에서 공장, 건설 현장, 의료시설 등의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은 84~85%를 차지하고 있음.⁴⁾

-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배달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생활폐기물 쓰레기마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임.

<그림 1> 최근 5년간 일일 폐기물 배출현황



- 매립지나 소각장이 부족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늘어나면 폐기물 처리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2018년에 t당 평균 23만 대였던 쓰레기 소각 비용은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29만 원 대로 뛰어올랐고, 14만원 대였던 쓰레기 매립 비용은 23만 원 대로 급등함.⁵⁾

- 쓰레기양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소각장, 매립지 등 처리시설은 턱없

4)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78&utm_source

5) 기사 제목: “[쓰레기 대란]② 전국 방방곡곡에 ‘쓰레기산’ 이 생겨났다” 한국경제 (Hankyung), 한국경제, 2021년 7월 26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267267Y?utm_source

이 부족하므로 불법쓰레기 매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확대가 필수적임.

- 이에 정부는 매립지 부족 문제 해소하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였으며, 2026년 수도권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임.⁶⁾ 이 조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잔재물(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⁷⁾
-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 즉,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생활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불태운 후에 매립하여야 함.

2.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공공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절차

1)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그림 2>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인가 및 허가절차가 의제처리 됨.⁸⁾ 또한 후보지 2킬로미터 이내 다른 지자체가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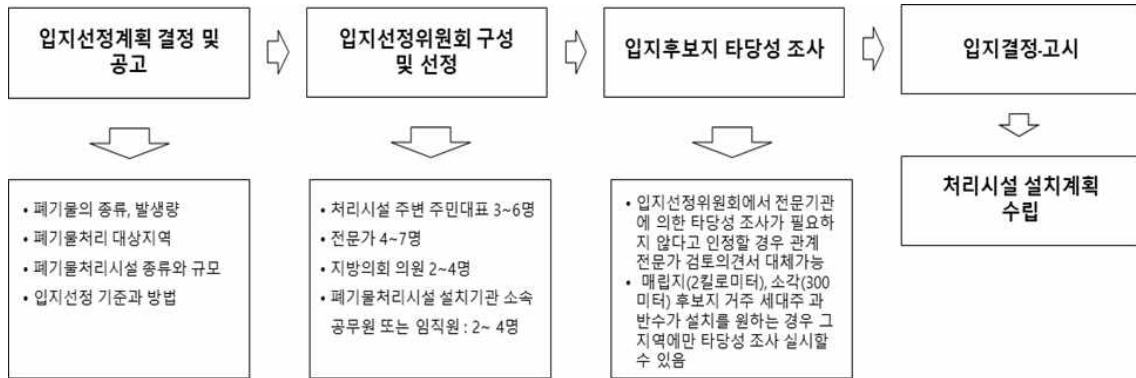
6) 환경부는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최소한 2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조치의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할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게 금지되지만 소각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면 2027년 말까지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시아경제 2025.5.12. 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51215181574251?utm_source)

7)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별표5])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하며, 이 절차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절차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입지 결정 고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⁹⁾

<그림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절차



○ ‘폐기물시설축진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아래의 시설을 설치하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을 말하며, 이 법은 공공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 규정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고, 민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음.¹⁰⁾

-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에만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함.¹¹⁾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축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입지선정계획에는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¹²⁾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¹³⁾
-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¹⁴⁾
-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¹⁵⁾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함)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¹⁶⁾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 입지선정위원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함.¹⁷⁾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절차’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¹⁸⁾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¹⁹⁾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²⁰⁾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

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8항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0항

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

〈표 3〉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하며,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됨. 직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소각은 300미터, 매립은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²¹⁾

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의2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렴한 후 결정·고시함.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²²⁾
- 주민지원협의체는 처리시설 소재지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협의하여 구성하며, 아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²³⁾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²⁴⁾
- 또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²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조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조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음.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²⁶⁾ 또한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주변환경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공개하여야 함.²⁷⁾

3.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1)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 위치 :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 ▪ 면적 : 793,909㎡(240,157평), 매립지 계획면적 261,500㎡(79,104평) ▪ 매립방법 : 개량형(혐기성) 위생매립 ▪ 계획매립용량 : 5,854,955㎥, 2019년말 매립량 2,892,678㎥(매립율49.41%) ▪ 사용기한 : 매립종료시총사업비 : 66,705백만원(2019년말 : 34,453백만원)
--

2)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요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1.1.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 및 매립 시작 ▪ 2005.1.1. 진주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본격 실시 ▪ 2011.12.31. 경남 진주시 내동면쓰레기매립장 매립기한 17년 경과 후 기간 연장.²⁸⁾ ▪ 2023.5. 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설치(국비 17억원, 시비 42억원 등 60억원, 935만 7500㎥, 연평균 7만 1500㎥ 규모) ▪ 2024.6.26.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각시설·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이 포함된 진주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를 조성할 계획 발표
--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 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조

3)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관련 언론 보도

- 2024년 정부의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반드시 소각 후 잔해물만을 매립해야 함.
- 진주시는 이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내동면쓰레기 매립장을 1순위 후보지로 두고 단독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7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루 280톤의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 시설을 준비 중이며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함.²⁹⁾
- 정부는 국비 지원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소각시설 광역화를 장려하였으나 진주시는 광역화에는 반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단독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도 주민 반발이 심하므로 타지역 쓰레기를 가져오는 광역시설에는 더 큰 반발로 예상되어 입지 선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하화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³⁰⁾
- 2024.4.26. 진주시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매립장 설치 이후 악취나 폐수로 피해를 보아왔다고 여기에 더해 소각시설까지 감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다이옥신 등이 배출돼 피해가 클 것이고 정화된 연기를 내보내더라도 인근 과수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주장함.³¹⁾
- 2024.7.15. 인근 주민들 80여명 대책 촉구에 나섬. 내동면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내동면매립장에 1995년부터 진주의 생활 쓰레기와 함께

28) 광역쓰레기매립장은 1995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40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조성 당시 주민과 17년만 운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추가 연장

29) 경남도민일보. (2023). 진주시, 내동면 매립장 인근 단독 소각시설 추진.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

30) 국민일보. (2024). 정부, 소각시설 광역화 국비 지원 확대...진주시는 반대.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

31) 진주신문(2024.4.26.) “반발만 키웠다“...내동면 소각시설 설치 주민 설명회. https://www.newsjinju.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4&utm_source=chatgpt.com

일부 산업폐기물까지 불법 매립되고 있다며 30년 넘게 분진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함.³²⁾

- 2025.1.8. 진주시 내동면비상대책위원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쓰레기 소각장설치 등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함.³³⁾
- 2025.6.6.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진 구성 실패함. 2025.6.12. 진주시가 배포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등을 소집해 진주시(안)으로 협의체 공동위원장 2명, 총무 2명 등 임원진을 구성하자고 제안함. 그러나 주민대표들은 진주시가 제안한 안이 협의체 정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함. 주민협의체 정관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을 무시하고 공동위원장 2명, 총무 2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임.³⁴⁾
- 2025.6.12. 진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진주시는 현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유력한 입지로 보고 있으나 주변 주민들은 진주시가 입지를 이미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필수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 참여가 없어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이며 진주시는 시간이 없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함.³⁵⁾

32) 연합뉴스. (2024.7.15). 진주 내동면 주민들, 소각장 반대 대책 촉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5097100052?section=search>

33) 경남신문. (2025a). 내동면비상대책위, 소각장 반대 탄원서 제출. 경남신문. <https://www.knnews.co.kr>

34) 경남신문. (2025b).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진 구성 실패…진주시 안 거부. 경남신문. <https://www.knnews.co.kr>

35) 진주신문. (2025.6.12.).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설명회…주민 불신 여전, 사천시 협의도 난항 https://www.newsjinju.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9&utm_source=chatgpt.com

IV.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

1. 연구 목적 및 대상

- 본 연구는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사례로 협력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상호작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진주시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버넌스 참여 수준, 역할 수행 정도, 제도적 기반, 상호신뢰와 협력 수준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음.

2. 표본 규모 및 표본추출방법

- 진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무작위추출(동·읍·면 지역별)을 사용함.

3.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8일 ~ 8월 22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로, 조사원에 의해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함.

4. 설문 구성

- 설문지는 총 8개 영역, 33문항(인식 관련 28문항, 응답자 특성 5문항)으로 구성됨,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설문 구성 및 문항 분류

구분	영역	주요 내용	문항 수
1영역	소각장 설치 사업 인식	사업 인지도, 중요성 인식, 정보접근 빈도	3문항
2영역	시민참여 관련 인식	시민 참여 기회 제공 여부, 참여 효과, 시민단체 활동 기여도, 대안 제시 역량	4문항
3영역	진주시 역할 인식	정보제공, 공식소통 창구 운영, 의견수렴 노력, 시민참여제도 마련 여부	4문항
4영역	진주시의회 역할 인식	갈등조정 기능, 책임성, 시민의견 반영 노력, 감시·견제 기능	4문항
5영역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	주체 간 상호 신뢰, 의사결정 과정 신뢰	2문항
6영역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	자발적 참여, 교류, 공식 참여 창구·절차 존재 여부	3문항
7영역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	정보공유, 협력 분위기, 갈등 시 협의 노력, 협력 네트워크 구축	4문항
8영역	공동의사결정 수준	합의도출 노력, 공동 결정 여부, 대안 논의, 책임 공유	4문항
응답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5문항

5.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자료를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V. 연구의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 본 설문조사는 진주시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부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295부를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음.
-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169명(57.3%), 여성이 126명(42.7%)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6%p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02명(34.6%)로 가장 많고, 50대가 69명(23.4%)으로 뒤를 이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반영됨. 반면, 60대 이상은 33명(11.2%)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거주지별 표본 특성에서는 동지역 거주자는 229명(77.6%), 읍면지역 거주자는 66명(22.4%)으로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
- 학력별 분포에서는 전문대·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195명(6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70명(23.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30명(10.2%)이었음.
-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상 거주자가 101명(34.2%), 20~30년 거주자가 86명(29.2%)으로, 전체의 63.4%가 장기 거주자에 해당함. 10년 미만 거주자는 61명(20.7%), 10~20년 거주자는 47명(15.9%)으로 나타남.

<표 5> 표본의 특성(N=295)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126	42.7
	남자	169	57.3
연령	20대 이하	102	34.6
	30대	47	15.9
	40대	44	14.9
	50대	69	23.4
	60대 이상	33	11.2
거주지	동지역	229	77.6
	읍면지역	66	22.4
학력	고등학교 이하	70	23.7
	전문대 · 대학 재학 및 졸업	195	66.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0	10.2
거주기간	10년 미만	61	20.7
	10-20년	47	15.9
	20-30년	86	29.2
	30년 이상	101	34.2

2.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인식 분석

〈표 6〉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소각장 설치사업 인지도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식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소각장 관련 정보접촉 빈도 (언론보도 및 소식)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소각장 설치 관련 언론보도나 소식을 접하는 빈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첫째, 진주시민들의 소각장 설치 사업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295명 가운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28.5%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4.8%)이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6%였으며, ‘그렇다’ 는 14.6%, ‘매우 그렇다’ 는 4.1%로 나타나 소각장 설치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8.7%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민 다수가 소각장 설치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정책 추진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의 대다수가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제공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 정보의 체계적인 홍보,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음. 즉 단순한 인지도 제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둘째, 진주시민들의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295명 가운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도 20.3%에 달해 긍정적 인식이 전체의 65.0%를 차지하였음. 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은 ‘전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6.4%로 합계 8.8%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응답은 시민들 다수가 소각장 설치 사업이 환경적 부담이 아니라 지역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소각장 설치 사업을 사회적갈등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적인 기회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조사결과에서 진주시민들의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중립적으로 판단한 집단과 소수의 부정적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공, 그리고 지역 환원 모델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이 높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소식을 통한 정보접촉 빈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전체 응답자 295명 중 ‘그렇지 않다’ (32.9%)와 ‘전혀 그렇지 않다’ (22.0%)를 합한 비율이 54.9%로 과반

수를 차지하였음. 이는 시민 다수가 관련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27.5%였고, ‘그렇다’ (12.9%)와 ‘매우 그렇다’ (4.7%)를 포함한 긍정적 응답은 17.6%에 불과하였음.

- 즉 시민 다수는 소각장 관련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일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매우 소수에 그친 것으로 해석됨.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 전달 및 홍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진주시는 단순한 언론보도 중심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생활밀착형의 다채널 홍보방식, 주민참여형의 소통구조, 지속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함.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설치 사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전반적으로 진주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다만 낮은 인지도, 정보접촉 빈도는 향후 진주시가 정책 추진 과정 시 갈등과 불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진주시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중립과 부정적 인식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 전략, 지속 가능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함. 이러한 전략이 구축된다면 향후 단순 갈등을 넘어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810	0.727	-0.390	0.697
	남성	169	2.846	0.848		
	전체	295	2.828	0.787		
연령	20대이하	102	2.719	0.743	1.021	0.397
	30대	47	2.801	0.818		
	40대	44	2.917	0.726		
	50대	69	2.947	0.885		
	60대이상	33	2.859	0.825		
	전체	295	2.831	0.797		
거주지	동지역	229	2.806	0.789	-0.967	0.334
	읍지역	66	2.914	0.825		
	전체	295	2.860	0.807		
학력	고졸이하	70	2.933	0.756	2.434	0.089
	대졸	195	2.761	0.827		
	대학원 졸	30	3.044	0.636		
	전체	295	2.831	0.797		
거주기간	10년미만	61	2.825	0.883	0.243	0.867
	10-20년	47	2.816	0.555		
	20-30년	86	2.783	0.689		
	30년 이상	101	2.881	0.922		
	전체	295	2.831	0.797		

1)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지도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즉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인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그러나 거주기간은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즉 장기 거주자일

수록 소각장 설치 사업을 더 잘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냄. 특히 30년 이상 거주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25.7%로 높았고, 10~20년 거주자는 ‘그렇지 않다’ 57.4%로 인식이 가장 낮았음.

- 이는 장기 거주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간 거주 연차 집단은 지역 정착 과정에서 정책 정보와 접촉 기회가 적어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 전략에서 거주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즉 진주시는 장기 거주자를 정책 추진의 협력자로, 중간 거주자를 정보 취약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동시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홍보와 정보제공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8>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33 26.2%	51 40.5%	23 18.3%	15 11.9%	4 3.2%	126 100.0%	$\chi^2=3.341$ df=4 p=.502
	남성	51 30.2%	56 33.1%	26 15.4%	28 16.6%	8 4.7%	169 100.0%	
	전체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35 34.3%	39 38.2%	18 17.6%	7 6.9%	3 2.9%	102 100.0%	$\chi^2=17.801$ df=16 p=.336
	30대	13 27.7%	20 42.6%	6 12.8%	5 10.6%	3 6.4%	47 100.0%	
	40대	9 20.5%	14 31.8%	11 25.0%	8 18.2%	2 4.5%	44 100.0%	
	50대	17 24.6%	25 36.2%	9 13.0%	15 21.7%	3 4.3%	69 100.0%	
	60대이상	10 30.3%	9 27.3%	5 15.2%	8 24.2%	1 3.0%	33 100.0%	
	전체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70 30.6%	87 38.0%	34 14.8%	30 13.1%	8 3.5%	229 100.0%	$\chi^2=6.685$ df=4 p=.154
	읍지역	14 21.2%	20 30.3%	15 22.7%	13 19.7%	4 6.1%	66 100.0%	
	전체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16 22.9%	25 35.7%	11 15.7%	16 22.9%	2 2.9%	70 100.0%	$\chi^2=7.904$ df=8 p=.443
	대졸	62 31.8%	69 35.4%	33 16.9%	23 11.8%	8 4.1%	195 100.0%	
	대학원 졸	6 20.0%	13 43.3%	5 16.7%	4 13.3%	2 6.7%	30 100.0%	
	전체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18 29.5%	21 34.4%	7 11.5%	12 19.7%	3 4.9%	61 100.0%	$\chi^2=22.579$ df=12 p=.032
	10-20년	8 17.0%	27 57.4%	8 17.0%	3 6.4%	1 2.1%	47 100.0%	
	20-30년	27 31.4%	34 39.5%	15 17.4%	8 9.3%	2 2.3%	86 100.0%	
	30년 이상	31 30.7%	25 24.8%	19 18.8%	20 19.8%	6 5.9%	101 100.0%	
	전체	84 28.5%	107 36.3%	49 16.6%	43 14.6%	12 4.1%	295 100.0%	

2)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영향 인식

- 전반적으로 소각장 설치 사업의 지역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5%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하여, 소각장 설치가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인프라 부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음.
- 반면,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각장 설치 사업의 지역 영향 인식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전반적으로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진주시민 다수가 설문에서 소각장 설치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과 건강의 위협, 지역 이미지 훼손 등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상존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안전성 검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 보장, 주민 불안 해소, 실질적인 지역 환원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소각장 운영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안전관리시스템,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제3의 독립적 검증기관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형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부담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복지 기금, 생활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지원, 인근지역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지역 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9>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영향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2 1.6%	7 5.6%	39 31.0%	50 39.7%	28 22.2%	126 100.0%	$\chi^2=4.466$ df=4 p=.347
	남성	5 3.0%	12 7.1%	38 22.5%	82 48.5%	32 18.9%	169 100.0%	
	전체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2 2.0%	10 9.8%	27 26.5%	43 42.2%	20 19.6%	102 100.0%	$\chi^2=17.483$ df=16 p=.355
	30대	0 0.0%	4 8.5%	14 29.8%	17 36.2%	12 25.5%	47 100.0%	
	40대	0 0.0%	1 2.3%	15 34.1%	20 45.5%	8 18.2%	44 100.0%	
	50대	4 5.8%	3 4.3%	12 17.4%	34 49.3%	16 23.2%	69 100.0%	
	60대이상	1 3.0%	1 3.0%	9 27.3%	18 54.5%	4 12.1%	33 100.0%	
	전체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4 1.7%	17 7.4%	61 26.6%	94 41.0%	53 23.1%	229 100.0%	$\chi^2=10.427$ df=4 p=.034
	읍지역	3 4.5%	2 3.0%	16 24.2%	38 57.6%	7 10.6%	66 100.0%	
	전체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2 2.9%	3 4.3%	21 30.0%	30 42.9%	14 20.0%	70 100.0%	$\chi^2=7.506$ df=8 p=.483
	대졸	5 2.6%	16 8.2%	51 26.2%	84 43.1%	39 20.0%	195 100.0%	
	대학원 졸	0 0.0%	0 0.0%	5 16.7%	18 60.0%	7 23.3%	30 100.0%	
	전체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2 3.3%	4 6.6%	11 18.0%	31 50.8%	13 21.3%	61 100.0%	$\chi^2=16.268$ df=12 p=.179
	10-20년	0 0.0%	1 2.1%	17 36.2%	23 48.9%	6 12.8%	47 100.0%	
	20-30년	0 0.0%	9 10.5%	22 25.6%	35 40.7%	20 23.3%	86 100.0%	
	30년 이상	5 5.0%	5 5.0%	27 26.7%	43 42.6%	21 20.8%	101 100.0%	
	전체	7 2.4%	19 6.4%	77 26.1%	132 44.7%	60 20.3%	295 100.0%	

3)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정보접촉 빈도

- 진주시민들의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정보접촉은 전반적으로 낮거나 ‘보통’ 수준임(보통 27.5%, 그렇지 않다 32.9%). 이는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별, 연령, 거주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남성, 50대, 읍면 지역 시민들이 비교적 더 많은 정보에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정책 정보의 전달 채널이 일부집단(읍면지역, 중장년층 남성)에 국한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학력별로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특히 고졸 이하 집단은 ‘보통’, ‘그렇다’ 응답이 높고, 대졸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음. 즉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보접촉 경험이 낮았음. 이는 공식적 정보 전달 채널의 한계, 또는 정보 신뢰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거주기간별로는 장기 거주자가 정보접촉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단기 거주자는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정보접촉 빈도도 낮았음. 따라서 온라인, SNS, 생활밀착형 홍보 등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정보접촉 수준이 낮기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의 양적 확대와 질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특히 대졸 이상 집단은 비판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전문적, 과학적 자료의 제공,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신뢰 구축이 필요함.

<표 10>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정보접촉 빈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25 19.8%	43 34.1%	43 34.1%	10 7.9%	5 4.0%	126 100.0%	$\chi^2=8.602$ df=4 p=.072
	남성	40 23.7%	54 32.0%	38 22.5%	28 16.6%	9 5.3%	169 100.0%	
	전체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26 25.5%	29 28.4%	31 30.4%	10 9.8%	6 5.9%	102 100.0%	$\chi^2=16.371$ df=16 p=.427
	30대	8 17.0%	22 46.8%	11 23.4%	4 8.5%	2 4.3%	47 100.0%	
	40대	9 20.5%	14 31.8%	16 36.4%	4 9.1%	1 2.3%	44 100.0%	
	50대	14 20.3%	23 33.3%	13 18.8%	15 21.7%	4 5.8%	69 100.0%	
	60대이상	8 24.2%	9 27.3%	10 30.3%	5 15.2%	1 3.0%	33 100.0%	
	전체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48 21.0%	81 35.4%	62 27.1%	26 11.4%	12 5.2%	229 100.0%	$\chi^2=4.901$ df=4 p=.298
	읍지역	17 25.8%	16 24.2%	19 28.8%	12 18.2%	2 3.0%	66 100.0%	
	전체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13 18.6%	16 22.9%	27 38.6%	14 20.0%	0 0.0%	70 100.0%	$\chi^2=24.467$ df=8 p=.002
	대졸	48 24.6%	72 36.9%	43 22.1%	18 9.2%	14 7.2%	195 100.0%	
	대학원 졸	4 13.3%	9 30.0%	11 36.7%	6 20.0%	0 0.0%	30 100.0%	
	전체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14 23.0%	24 39.3%	14 23.0%	8 13.1%	1 1.6%	61 100.0%	$\chi^2=19.892$ df=12 p=.069
	10-20년	4 8.5%	18 38.3%	21 44.7%	4 8.5%	0 0.0%	47 100.0%	
	20-30년	21 24.4%	27 31.4%	20 23.3%	13 15.1%	5 5.8%	86 100.0%	
	30년 이상	26 25.7%	28 27.7%	26 25.7%	13 12.9%	8 7.9%	101 100.0%	
	전체	65 22.0%	97 32.9%	81 27.5%	38 12.9%	14 4.7%	295 100.0%	

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시민참여 인식 분석

〈표 11〉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시민 정책참여 기회 제공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시민참여의 문제해결 기여도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해결 기여도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시민단체의 대안제시 역량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인식을 분석하고자,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정도, 시민참여가 문제 해결에 미치는 기여도,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 등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시민들은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정책 참여 기회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참여 자체의 문제 해결 기여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의 효과성에는 회의적이나, 대안 제시 역량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은 ‘보통(36.9%)’와 ‘그렇지 않다’ (35.6%)가 비슷한 수준이며,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9%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제도적인 실질적 참여 통로가 부족함을 시사함.
- 둘째,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는 긍정응답이 45.7%로 부정응답 22.7%보다 높음. 즉 시민참여가 문제 해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따라서 참여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셋째,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는 ‘보통’ 이 44.7%로 가장 많음. 긍정 응답(29.5%)과 부정응답(25.8%)이 유사하여 시민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넷째,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은 긍정 응답(38.3%)이 부정 응답(26.4%)보다 높음. 그러나 ‘보통’ (35.3%)도 상당하여 역량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는 않음.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기회가 필요하며, 시민단체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정보접근성 지원 등이 필요함. 또한 시민단체의 역량이 정책결정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단순 홍보가 아닌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을 통한 신뢰 형성이 매우 필요함.
-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등에서 시민참여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즉 진주시민들은 대부분 유사한 참여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거주기간은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은 3.34, 10-20년이 3.31로 시민참여 인식이 높았음. 반면, 20-30년이 3.03, 30년 이상은 3.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중간 정도일 때 시민참여 인식이 높았으며 장기 거주자일수록 낮음. 이러한 결과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지역 현안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으며, 기본방식에 익숙해져 새로운 방식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통 채널 재설계, 새로운 참여 동기 부여가 필요해 보이며, 신규거주자 및 중간 거주자의 높은 참여 의지를 활용하여 참여 네트워크 확산의 촉매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시민참여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3.087	0.765	-0.897	0.371
	남성	169	3.174	0.855		
	전체	295	3.130	0.810		
연령	20대이하	102	3.121	0.775	0.333	0.856
	30대	47	3.156	0.887		
	40대	44	3.068	0.753		
	50대	69	3.222	0.896		
	60대이상	33	3.071	0.785		
	전체	295	3.137	0.817		
거주지	동지역	229	3.125	0.825	-0.451	0.652
	읍지역	66	3.177	0.796		
	전체	295	3.151	0.810		
학력	고졸이하	70	3.157	0.806	0.100	0.905
	대졸	195	3.139	0.855		
	대학원 졸	30	3.078	0.572		
	전체	295	3.137	0.817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344	0.745	3.395	0.018
	10-20년	47	3.319	0.748		
	20-30년	86	3.039	0.709		
	30년 이상	101	3.010	0.937		
	전체	295	3.137	0.817		

1) 진주시민의 시민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진주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 학력 등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시민들이 성별이나 세대,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거주지와 거주기간에서는 일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지역 거주자에 비해 정책 참여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주민 참여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공되거나 체감되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거주기간별로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정책참여 기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특히 30년 이상 거주한 집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높았음. 이는 장기간 거주로 형성된 제도에 대한 불신 및 참여 피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10-20년 거주자들은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지역사회 참여기대와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즉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 거주자의 참여 피로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소통 및 피드백 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표 13> 진주시의 시민 정책 참여 기회 제공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20 15.9%	45 35.7%	45 35.7%	16 12.7%	0 0.0%	126 100.0%	$\chi^2=2.496$ df=4 p=.645
	남성	20 11.8%	60 35.5%	64 37.9%	23 13.6%	2 1.2%	169 100.0%	
	전체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11 10.8%	37 36.3%	43 42.2%	10 9.8%	1 1.0%	102 100.0%	$\chi^2=17.233$ df=16 p=.371
	30대	5 10.6%	14 29.8%	21 44.7%	7 14.9%	0 0.0%	47 100.0%	
	40대	4 9.1%	19 43.2%	12 27.3%	9 20.5%	0 0.0%	44 100.0%	
	50대	13 18.8%	28 40.6%	20 29.0%	7 10.1%	1 1.4%	69 100.0%	
	60대이상	7 21.2%	7 21.2%	13 39.4%	6 18.2%	0 0.0%	33 100.0%	
	전체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31 13.5%	88 38.4%	84 36.7%	24 10.5%	2 0.9%	229 100.0%	$\chi^2=8.720$ df=4 p=.068
	읍지역	9 13.6%	17 25.8%	25 37.9%	15 22.7%	0 0.0%	66 100.0%	
	전체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7 10.0%	22 31.4%	29 41.4%	11 15.7%	1 1.4%	70 100.0%	$\chi^2=6.448$ df=8 p=.597
	대졸	27 13.8%	70 35.9%	70 35.9%	27 13.8%	1 0.5%	195 100.0%	
	대학원 졸	6 20.0%	13 43.3%	10 33.3%	1 3.3%	0 0.0%	30 100.0%	
	전체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4 6.6%	25 41.0%	24 39.3%	7 11.5%	1 1.6%	61 100.0%	$\chi^2=18.897$ df=12 p=.091
	10-20년	2 4.3%	18 38.3%	18 38.3%	9 19.1%	0 0.0%	47 100.0%	
	20-30년	13 15.1%	33 38.4%	33 38.4%	6 7.0%	1 1.2%	86 100.0%	
	30년 이상	21 20.8%	29 28.7%	34 33.7%	17 16.8%	0 0.0%	101 100.0%	
	전체	40 13.6%	105 35.6%	109 36.9%	39 13.2%	2 0.7%	295 100.0%	

2)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

- 시민참여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 과 ‘그렇다’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다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 보통과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5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중도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음.
- 거주기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10년 미만 거주자는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를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으나 20-30년의 장기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높았음.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결과가 환류되는 경험이 강화되어야 함. 둘째,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참여전략이 필요함.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느낀 불신과 회의감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표 14> 시민참여의 문제 해결 기여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6 4.8%	23 18.3%	46 36.5%	41 32.5%	10 7.9%	126 100.0%	$\chi^2=7.382$ df=4 p=.117
	남성	12 7.1%	26 15.4%	47 27.8%	55 32.5%	29 17.2%	169 100.0%	
	전체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연령	20대이하	4 3.9%	20 19.6%	28 27.5%	35 34.3%	15 14.7%	102 100.0%	$\chi^2=13.070$ df=16 p=.668
	30대	2 4.3%	6 12.8%	16 34.0%	18 38.3%	5 10.6%	47 100.0%	
	40대	3 6.8%	6 13.6%	17 38.6%	16 36.4%	2 4.5%	44 100.0%	
	50대	5 7.2%	11 15.9%	20 29.0%	21 30.4%	12 17.4%	69 100.0%	
	60대이상	4 12.1%	6 18.2%	12 36.4%	6 18.2%	5 15.2%	33 100.0%	
	전체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2 5.2%	42 18.3%	72 31.4%	71 31.0%	32 14.0%	229 100.0%	$\chi^2=4.276$ df=4 p=.370
	읍지역	6 9.1%	7 10.6%	21 31.8%	25 37.9%	7 10.6%	66 100.0%	
	전체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12 17.1%	24 34.3%	20 28.6%	10 14.3%	70 100.0%	$\chi^2=7.008$ df=8 p=.536
	대졸	14 7.2%	33 16.9%	55 28.2%	66 33.8%	27 13.8%	195 100.0%	
	대학원 졸	0 0.0%	4 13.3%	14 46.7%	10 33.3%	2 6.7%	30 100.0%	
	전체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4 6.6%	9 14.8%	12 19.7%	24 39.3%	12 19.7%	61 100.0%	$\chi^2= 23.337$ df=12 p=.025
	10-20년	0 0.0%	7 14.9%	13 27.7%	22 46.8%	5 10.6%	47 100.0%	
	20-30년	3 3.5%	18 20.9%	28 32.6%	27 31.4%	10 11.6%	86 100.0%	
	30년 이상	11 10.9%	15 14.9%	40 39.6%	23 22.8%	12 11.9%	101 100.0%	
	전체	18 6.1%	49 16.6%	93 31.5%	96 32.5%	39 13.2%	295 100.0%	

3)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

-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 과 ‘그렇다’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이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보통’ 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30대 이상은 ‘보통’ 과 ‘그렇다’ 가 비슷하였음.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그렇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또한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역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시민단체 활동의 기여도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함. 즉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등은 시민들의 배경과 무관하여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가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 일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전 연령층과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시민단체의 지원책이 필요함. 둘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보통’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셋째, 시민단체가 단순한 비판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제시 및 정책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마련이 필요함.

<표 15>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여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4 3.2%	28 22.2%	58 46.0%	33 26.2%	3 2.4%	126 100.0%	$\chi^2=4.770$ df=4 p=.312
	남성	13 7.7%	31 18.3%	74 43.8%	42 24.9%	9 5.3%	169 100.0%	
	전체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연령	20대이하	6 5.9%	23 22.5%	55 53.9%	13 12.7%	5 4.9%	102 100.0%	$\chi^2=19.726$ df=16 p=.233
	30대	4 8.5%	10 21.3%	18 38.3%	14 29.8%	1 2.1%	47 100.0%	
	40대	2 4.5%	10 22.7%	17 38.6%	14 31.8%	1 2.3%	44 100.0%	
	50대	5 7.2%	9 13.0%	28 40.6%	23 33.3%	4 5.8%	69 100.0%	
	60대이상	0 0.0%	7 21.2%	14 42.4%	11 33.3%	1 3.0%	33 100.0%	
	전체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4 6.1%	48 21.0%	100 43.7%	58 25.3%	9 3.9%	229 100.0%	$\chi^2=1.008$ df=4 p=.909
	읍지역	3 4.5%	11 16.7%	32 48.5%	17 25.8%	3 4.5%	66 100.0%	
	전체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3 4.3%	12 17.1%	31 44.3%	20 28.6%	4 5.7%	70 100.0%	$\chi^2=4.689$ df=8 p=.790
	대졸	14 7.2%	39 20.0%	88 45.1%	47 24.1%	7 3.6%	195 100.0%	
	대학원 졸	0 0.0%	8 26.7%	13 43.3%	8 26.7%	1 3.3%	30 100.0%	
	전체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1 1.6%	11 18.0%	32 52.5%	12 19.7%	5 8.2%	61 100.0%	$\chi^2= 12.881$ df=12 p=.378
	10-20년	3 6.4%	7 14.9%	23 48.9%	13 27.7%	1 2.1%	47 100.0%	
	20-30년	4 4.7%	21 24.4%	39 45.3%	20 23.3%	2 2.3%	86 100.0%	
	30년 이상	9 8.9%	20 19.8%	38 37.6%	30 29.7%	4 4.0%	101 100.0%	
	전체	17 5.8%	59 20.0%	132 44.7%	75 25.4%	12 4.1%	295 100.0%	

4)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

-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과 ‘그렇다’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매우 그렇다’ (6.5%) 비율이 여성(0.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도 전반적으로 ‘보통’과 ‘그렇다’ 응답이 고르게 분포했으며, 30대와 50대에서는 ‘그렇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음.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보통’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와 대졸 집단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반면,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시민들이 동지역 시민보다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읍면지역에서 ‘그렇다’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음. 또한 거주기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10년 미만 및 10~20년 거주자의 경우 ‘그렇다’ 응답이 각각 45.9%, 44.7%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30년 거주자는 ‘보통’ 응답(44.2%)이 많아 중도적 인식이 우세하였음.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 집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3.9%)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에 대해 비판적 태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시민단체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활동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읍면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긍정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동지역에서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 거주자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안 제시 과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함. 셋째, 단기 거주자의 긍정적 태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요구됨.

<표 16>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역량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9 7.1%	26 20.6%	44 34.9%	46 36.5%	1 0.8%	126 100.0%	$\chi^2=6.331$ df=4 p=.176
	남성	12 7.1%	31 18.3%	60 35.5%	55 32.5%	11 6.5%	169 100.0%	
	전체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연령	20대이하	7 6.9%	19 18.6%	38 37.3%	31 30.4%	7 6.9%	102 100.0%	$\chi^2=11.310$ df=16 p=.790
	30대	4 8.5%	8 17.0%	13 27.7%	22 46.8%	0 0.0%	47 100.0%	
	40대	3 6.8%	9 20.5%	19 43.2%	12 27.3%	1 2.3%	44 100.0%	
	50대	5 7.2%	12 17.4%	23 33.3%	26 37.7%	3 4.3%	69 100.0%	
	60대이상	2 6.1%	9 27.3%	11 33.3%	10 30.3%	1 3.0%	33 100.0%	
	전체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6 7.0%	44 19.2%	88 38.4%	69 30.1%	12 5.2%	229 100.0%	$\chi^2=11.455$ df=4 p=.022
	읍지역	5 7.6%	13 19.7%	16 24.2%	32 48.5%	0 0.0%	66 100.0%	
	전체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19 27.1%	19 27.1%	26 37.1%	2 2.9%	70 100.0%	$\chi^2=13.630$ df=8 p=.092
	대졸	16 8.2%	29 14.9%	71 36.4%	69 35.4%	10 5.1%	195 100.0%	
	대학원 졸	1 3.3%	9 30.0%	14 46.7%	6 20.0%	0 0.0%	30 100.0%	
	전체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1 1.6%	9 14.8%	20 32.8%	28 45.9%	3 4.9%	61 100.0%	$\chi^2= 25.392$ df=12 p=.013
	10-20년	1 2.1%	7 14.9%	15 31.9%	21 44.7%	3 6.4%	47 100.0%	
	20-30년	5 5.8%	21 24.4%	38 44.2%	21 24.4%	1 1.2%	86 100.0%	
	30년 이상	14 13.9%	20 19.8%	31 30.7%	31 30.7%	5 5.0%	101 100.0%	
	전체	21 7.1%	57 19.3%	104 35.3%	101 34.2%	12 4.1%	295 100.0%	

4.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 역할 인식 분석

〈표 17〉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 역할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시민 대상 정보제공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공식 소통창구 운영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시민참여제도 마련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 대상 정보제공, 공식 소통 창구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 등을 조사하였음.
- 첫째, 시민 대상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53.6%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긍정 응답은 13.2%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정책 과정과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둘째, 공식 소통 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43.1%)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응답은 44.8%, 긍정 응답은 12.2%로 다소 낮았음. 이는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나 민원 대응 창구가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평가하지 않음을 보여줌.
-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임. ‘보통’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 응답은 21.1%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 응답은 35.6%로 의견수렴 과정에 일정한 노력이 존재하나 여전히 체감도가 낮음을 의미함.

- 넷째,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은 ‘보통’ 이 46.8%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응답은 20.7%, 부정적 응답은 32.6%로 나타남. 이는 참여 제도 자체는 마련 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의 정책 집행 과정의 정보제공과 소통 부문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는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의 확보에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식 소통 창구와 관련해서 중립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단순히 제도적 형식만 존재한다고 하여 시민들은 이를 실질적인 소통 경로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임. 다만 응답 분포에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한계를 보여줌. 즉 시민들이 행정의 참여 제도를 형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 구축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시민 대상의 정보제공이 가장 낮게 평가된 만큼, 정책 관련 정보의 공개성,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단순히 소통 창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의·민원·의견제시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셋째,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행정 신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참여 기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신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진주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음. 분석결과 성별에서는 남성(평균=2.74)이 여성(평균=2.57)보다 다소 높

게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2.69)와 30대(2.79)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40대 이상에서는 평균이 2.59 수준으로 낮아졌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 동지역 거주자의 평균은 2.60인 반면, 읍면지역 거주자는 2.89로 나타나, 읍면지역 시민들이 진주시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력별로는 고졸이하(2.75), 대졸(2.67), 대학원 졸업(2.44)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판적 경향을 보임.
- 거주기간별 인식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남.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2.92로 가장 긍정적 인식을 보이거나 20-30년은 2.58, 30년 이상은 2.57로 낮게 평가함.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행정서비스의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그러나 단기 거주자는 최근 행정환경의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체감했을 가능성이 있음.
- 진주시 역할 인식은 종합적으로 평균 2.67로서 ‘보통 이하’의 수준이며 거주지, 거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따라서 정책 수립에서 지역적 특성과 거주기간별 경험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읍면 지역의 긍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동지역 시민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와 소통 채널 확대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장기 거주자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의 환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비판적 의식이 강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18〉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 역할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575	0.726	-1.839	0.067
	남성	169	2.743	0.805		
	전체	295	2.659	0.766		
연령	20대이하	102	2.694	0.723	0.556	0.695
	30대	47	2.798	0.589		
	40대	44	2.619	0.882		
	50대	69	2.594	0.847		
	60대이상	33	2.652	0.875		
	전체	295	2.671	0.776		
거주지	동지역	229	2.606	0.753	-2.722	0.007
	읍지역	66	2.898	0.816		
	전체	295	2.752	0.784		
학력	고졸이하	70	2.754	0.825	1.722	0.180
	대졸	195	2.677	0.743		
	대학원 졸	30	2.442	0.848		
	전체	295	2.671	0.776		
거주기간	10년미만	61	2.922	0.773	3.167	0.025
	10-20년	47	2.718	0.783		
	20-30년	86	2.584	0.670		
	30년 이상	101	2.572	0.831		
	전체	295	2.671	0.776		

1) 진주시 시민 대상 정보제공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 시민 대상 정보제공 인식 차이 분석하였음. 전체 응답을 보면, ‘그렇지 않다’ (40.0%)와 ‘보통’ (33.2%)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다’ (11.5%)와 ‘매우 그렇다’ (1.7%)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진주시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
나(남성 17.8%, 여성 7.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연령별로는 20
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전반적으로 ‘보통’ 과 ‘그렇지 않다’ 응답
이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없었음.
-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읍면 지역 시민은 긍정 응
답이 21.2%로, 동 지역 시민(10.9%)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읍면 지역 시
민들이 동 지역 시민보다 진주시의 정보제공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함.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경향을 보였음.
-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0년 미만은 긍정적 응
답이 21.3%로 비교적 높았지만 30년 이상은 부정적 응답이 55.4%에 달해 장
기 거주자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주시의 정보제공에 대한 시민 인식은 전반적
으로 낮은 수준이며 거주지 요인만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임. 특히 읍
면지역의 시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동지역과 장기 거주자, 고학력 집
단은 다소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따라서 향후 진주시는 지역 간 격차, 거
주기간 및 학력에 따른 기대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음

<표 19> 진주시 시민 대상 정보제공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7 13.5%	57 45.2%	43 34.1%	8 6.3%	1 0.8%	126 100.0%	$\chi^2=7.731$ df=4 p=.102
	남성	23 13.6%	61 36.1%	55 32.5%	26 15.4%	4 2.4%	169 100.0%	
	전체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14 13.7%	42 41.2%	34 33.3%	11 10.8%	1 1.0%	102 100.0%	$\chi^2=9.389$ df=16 p=.897
	30대	4 8.5%	20 42.6%	19 40.4%	4 8.5%	0 0.0%	47 100.0%	
	40대	8 18.2%	12 27.3%	15 34.1%	8 18.2%	1 2.3%	44 100.0%	
	50대	10 14.5%	30 43.5%	20 29.0%	7 10.1%	2 2.9%	69 100.0%	
	60대이상	4 12.1%	14 42.4%	10 30.3%	4 12.1%	1 3.0%	33 100.0%	
	전체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34 14.8%	98 42.8%	72 31.4%	23 10.0%	2 0.9%	229 100.0%	$\chi^2=10.252$ df=4 p=.036
	읍지역	6 9.1%	20 30.3%	26 39.4%	11 16.7%	3 4.5%	66 100.0%	
	전체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30 42.9%	23 32.9%	10 14.3%	2 2.9%	70 100.0%	$\chi^2=10.188$ df=8 p=.252
	대졸	27 13.8%	78 40.0%	65 33.3%	23 11.8%	2 1.0%	195 100.0%	
	대학원 졸	8 26.7%	10 33.3%	10 33.3%	1 3.3%	1 3.3%	30 100.0%	
	전체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6 9.8%	27 44.3%	15 24.6%	11 18.0%	2 3.3%	61 100.0%	$\chi^2=12.443$ df=12 p=.411
	10-20년	4 8.5%	19 40.4%	18 38.3%	6 12.8%	0 0.0%	47 100.0%	
	20-30년	13 15.1%	33 38.4%	34 39.5%	5 5.8%	1 1.2%	86 100.0%	
	30년 이상	17 16.8%	39 38.6%	31 30.7%	12 11.9%	2 2.0%	101 100.0%	
	전체	40 13.6%	118 40.0%	98 33.2%	34 11.5%	5 1.7%	295 100.0%	

2) 진주시 공식 소통 창구 운영

- 진주시 공식 소통 창구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인식은 ‘보통’ (43.1%)과 ‘그렇지 않다’ (33.6%)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 (10.2%)와 ‘매우 그렇다’ (2.0%)와 같은 긍정적 응답은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시민들이 공식 소통 창구 운영을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여성은 ‘보통’ (46.8%)과 ‘그렇지 않다’ (34.9%) 응답이 많아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반면, 남성은 ‘그렇다’ (14.8%)와 ‘매우 그렇다’ (3.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이는 진주시의 공식 소통 창구 운영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
-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다만 응답 분포를 보면, 30대는 ‘보통’ 응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음.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응답이 45%를 넘어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거주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읍면 지역 시민은 ‘그렇다’ 이상 긍정적 응답이 18.2%로 동 지역 주민(10.5%)보다 높아 공식 소통 창구 운영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학력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졸 이하 집단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20.0%로 가장 높아 비판적 태도를 보였음.

- 거주기간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높았지만,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장기 거주자일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주시의 공식적 소통창구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보통’ 수준이며 긍정적 평가도 제한적임. 특히 성별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그러나 읍면지역, 단기 거주자, 저학력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고학력과 장기 거주자 집단은 부정적 인식을 보였음.
- 따라서 진주시는 공식적 소통 창구의 운영에서 성별 차이에 따른 맞춤형 소통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 거주자 및 고학력 집단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투명성 및 신뢰성의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임.

〈표 20〉 진주시 공식 소통 창구 운영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7 13.5%	44 34.9%	59 46.8%	5 4.0%	1 0.8%	126 100.0%	$\chi^2=11.875$ df=4 p=.018
	남성	16 9.5%	55 32.5%	68 40.2%	25 14.8%	5 3.0%	169 100.0%	
	전체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연령	20대이하	10 9.8%	38 37.3%	41 40.2%	12 11.8%	1 1.0%	102 100.0%	$\chi^2=13.830$ df=16 p=.611
	30대	2 4.3%	14 29.8%	27 57.4%	3 6.4%	1 2.1%	47 100.0%	
	40대	7 15.9%	14 31.8%	16 36.4%	7 15.9%	0 0.0%	44 100.0%	
	50대	9 13.0%	23 33.3%	29 42.0%	5 7.2%	3 4.3%	69 100.0%	
	60대이상	5 15.2%	10 30.3%	14 42.4%	3 9.1%	1 3.0%	33 100.0%	
	전체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26 11.4%	84 36.7%	95 41.5%	19 8.3%	5 2.2%	229 100.0%	$\chi^2=7.223$ df=4 p=.125
	읍지역	7 10.6%	15 22.7%	32 48.5%	11 16.7%	1 1.5%	66 100.0%	
	전체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7 10.0%	20 28.6%	32 45.7%	9 12.9%	2 2.9%	70 100.0%	$\chi^2=5.426$ df=8 p=.711
	대졸	20 10.3%	68 34.9%	85 43.6%	19 9.7%	3 1.5%	195 100.0%	
	대학원 졸	6 20.0%	11 36.7%	10 33.3%	2 6.7%	1 3.3%	30 100.0%	
	전체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21 34.4%	29 47.5%	6 9.8%	3 4.9%	61 100.0%	$\chi^2= 14.875$ df=12 p=.248
	10-20년	5 10.6%	15 31.9%	18 38.3%	9 19.1%	0 0.0%	47 100.0%	
	20-30년	11 12.8%	31 36.0%	38 44.2%	5 5.8%	1 1.2%	86 100.0%	
	30년 이상	15 14.9%	32 31.7%	42 41.6%	10 9.9%	2 2.0%	101 100.0%	
	전체	33 11.2%	99 33.6%	127 43.1%	30 10.2%	6 2.0%	295 100.0%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에 대한 인식을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하였음.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43.4%가 ‘보통’, 18.0%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의견수렴 노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도 35.6%에 달해, 주민들의 인식이 긍·부정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보통’ 이상의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의견수렴 노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보통’과 ‘그렇다’의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세대별 경험과 기대치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거주지별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거주자가 의견수렴의 노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읍면지역에서 추진된 소통의 경험과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잘 인식된 결과로 보임. 따라서 동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참여전략이 필요함.
- 학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그러나 대졸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이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은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그렇다 이상의 긍정 응답이 37.7%로 높았음. 이는 신규 거주자들이 정책 참여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20-30년 거주자는 보통 응답이 절반으로 의견수렴을 당연하게 인식하거나 소극적으로 인식하였음. 3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31.7%로 높아 시정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참여전략이 필요해 보임.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결과가 환류되는 체험을 제공해야 함. 둘째, 읍·동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대별로 다른 참여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은 온라인 기반 참여 방식에 친숙한 반면, 중장년층은 대면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표 2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2 9.5%	39 31.0%	48 38.1%	24 19.0%	3 2.4%	126 100.0%	$\chi^2=3.517$ df=4 p=.475
	남성	11 6.5%	43 25.4%	80 47.3%	29 17.2%	6 3.6%	169 100.0%	
	전체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연령	20대이하	6 5.9%	28 27.5%	47 46.1%	17 16.7%	4 3.9%	102 100.0%	$\chi^2=15.428$ df=16 p=.494
	30대	2 4.3%	9 19.1%	23 48.9%	12 25.5%	1 2.1%	47 100.0%	
	40대	5 11.4%	13 29.5%	19 43.2%	7 15.9%	0 0.0%	44 100.0%	
	50대	6 8.7%	24 34.8%	25 36.2%	13 18.8%	1 1.4%	69 100.0%	
	60대이상	4 12.1%	8 24.2%	14 42.4%	4 12.1%	3 9.1%	33 100.0%	
	전체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9 8.3%	67 29.3%	103 45.0%	35 15.3%	5 2.2%	229 100.0%	$\chi^2=8.333$ df=4 p=.080
	읍지역	4 6.1%	15 22.7%	25 37.9%	18 27.3%	4 6.1%	66 100.0%	
	전체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23 32.9%	23 32.9%	15 21.4%	4 5.7%	70 100.0%	$\chi^2=11.038$ df=8 p=.200
	대졸	15 7.7%	47 24.1%	93 47.7%	36 18.5%	4 2.1%	195 100.0%	
	대학원 졸	3 10.0%	12 40.0%	12 40.0%	2 6.7%	1 3.3%	30 100.0%	
	전체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10 16.4%	26 42.6%	20 32.8%	3 4.9%	61 100.0%	$\chi^2= 27.121$ df=12 p=.007
	10-20년	6 12.8%	11 23.4%	19 40.4%	11 23.4%	0 0.0%	47 100.0%	
	20-30년	4 4.7%	29 33.7%	43 50.0%	7 8.1%	3 3.5%	86 100.0%	
	30년 이상	11 10.9%	32 31.7%	40 39.6%	15 14.9%	3 3.0%	101 100.0%	
	전체	23 7.8%	82 27.8%	128 43.4%	53 18.0%	9 3.1%	295 100.0%	

4)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 마련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8%가 ‘보통’, 19.7%가 ‘그렇다’, 1.0%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 마련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 응답도 32.6%에 달해 제도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거주지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적 인식을 보였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님.
- 그러나 거주기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 응답이 높았지만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상의 결과는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이 제도적으로는 일정 부분 인식되지만, 시민 체감도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특히 장기 거주자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낮게 평가하거나 불만을 나타내어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시민 신뢰의 확보로 연결되지 않음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시민참여 제도의 운영은 실질적 효과와 환류의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 체감도 제고 전략이 요구됨. 이는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환류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읍·동지역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읍면지역의 긍정적 경험을 동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임. 셋째, 세대 및 거주 경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참여 설계가 필요함. 청년층과 신규 거주자에게는 참여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를, 장기 거주자에게는 실질적 성과 확인을 통한 신뢰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2> 진주시의 시민참여 제도 마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0 7.9%	34 27.0%	57 45.2%	25 19.8%	0 0.0%	126 100.0%	$\chi^2=2.736$ df=4 p=.603
	남성	12 7.1%	40 23.7%	81 47.9%	33 19.5%	3 1.8%	169 100.0%	
	전체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연령	20대이하	6 5.9%	23 22.5%	49 48.0%	22 21.6%	2 2.0%	102 100.0%	$\chi^2=12.002$ df=16 p=.744
	30대	1 2.1%	9 19.1%	28 59.6%	9 19.1%	0 0.0%	47 100.0%	
	40대	5 11.4%	12 27.3%	17 38.6%	10 22.7%	0 0.0%	44 100.0%	
	50대	7 10.1%	20 29.0%	31 44.9%	10 14.5%	1 1.4%	69 100.0%	
	60대이상	3 9.1%	10 30.3%	13 39.4%	7 21.2%	0 0.0%	33 100.0%	
	전체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8 7.9%	64 27.9%	105 45.9%	39 17.0%	3 1.3%	229 100.0%	$\chi^2=8.222$ df=4 p=.084
	읍지역	4 6.1%	10 15.2%	33 50.0%	19 28.8%	0 0.0%	66 100.0%	
	전체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6 8.6%	17 24.3%	31 44.3%	15 21.4%	1 1.4%	70 100.0%	$\chi^2=2.664$ df=8 p=.954
	대졸	13 6.7%	47 24.1%	95 48.7%	38 19.5%	2 1.0%	195 100.0%	
	대학원 졸	3 10.0%	10 33.3%	12 40.0%	5 16.7%	0 0.0%	30 100.0%	
	전체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14 23.0%	24 39.3%	18 29.5%	3 4.9%	61 100.0%	$\chi^2= 27.692$ df=12 p=.006
	10-20년	5 10.6%	6 12.8%	24 51.1%	12 25.5%	0 0.0%	47 100.0%	
	20-30년	4 4.7%	25 29.1%	45 52.3%	12 14.0%	0 0.0%	86 100.0%	
	30년 이상	11 10.9%	29 28.7%	45 44.6%	16 15.8%	0 0.0%	101 100.0%	
	전체	22 7.5%	74 25.1%	138 46.8%	58 19.7%	3 1.0%	295 100.0%	

5.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분석

〈표 2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갈등조정 역할 수행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책임감 있는 정책결정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시민의견 정책반영 노력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의회의 갈등 조정의 역할 수행, 책임감 있는 정책결정,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감시 및 견제 기능의 수행 등을 조사하였음.
- 분석결과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구체적으로 갈등 조정 역할 수행은 44.4%가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긍정적 응답은 19.7%에 불과하였음. 이는 진주시의회가 갈등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담당하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진주시의회의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도 49.2%가 보통으로 평가하였고 긍정 응답은 19.0%에 머무름. 이는 진주시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을 보여주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도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도 보통 응답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응답은 22.7%에 불과하였음. 이는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냄.

- 감시 및 견제 기능의 수행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 52.5%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긍정 응답은 18.6%로 나타남. 이는 진주시의회의 핵심적 책무인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시민들로부터 아직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이상의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의회의 제도적 기능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나 환류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둘째,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를 넘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환류되는 경험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의회의 갈등 조정 및 견제 기능의 실질적 수행 여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 거주지별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3.04점으로 동지역 2.75점 보다 높았음. 이는 읍면지역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줌.
- 또한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가 3.11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년 이상 거주자는 2.66으로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경험했음을 시사함.
-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성별의 경우 여성(2.79)과 남성(2.84)의 평균 차이는 미미했으며,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

(2.86), 대졸(2.85), 대학원 졸 이상(2.53)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대 이하(2.93)와 30대(3.00)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40대(2.68)와 50대(2.65)는 낮은 인식을 보였음. 전체적으로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평균은 2.82로, 시민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위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읍면지역 시민들이 체감하는 참여 방식과 의회 접근성을 동지역에서도 적용하여 지역 간 인식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거주기간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소통 전략이 요구됨. 특히 장기 거주자일수록 낮은 인식을 보이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환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체 평균이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하고 시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표 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주시의회 역할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791	0.794	-0.568	0.570
	남성	169	2.844	0.791		
	전체	295	2.818	0.793		
연령	20대이하	102	2.931	0.705	2.246	0.064
	30대	47	3.000	0.711		
	40대	44	2.682	0.903		
	50대	69	2.659	0.828		
	60대이상	33	2.758	0.856		
	전체	295	2.822	0.791		
거주지	동지역	229	2.759	0.790	-2.583	0.010
	읍지역	66	3.042	0.763		
	전체	295	2.900	0.776		
학력	고졸이하	70	2.868	0.811	2.254	0.107
	대졸	195	2.850	0.794		
	대학원 졸	30	2.533	0.691		
	전체	295	2.822	0.791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115	0.720	4.399	0.005
	10-20년	47	2.872	0.769		
	20-30년	86	2.767	0.759		
	30년 이상	101	2.668	0.830		
	전체	295	2.822	0.791		

1) 갈등 조정 역할 수행 정도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4%가 ‘보통’, 18.0%가 ‘그렇다’, 1.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진주시의 갈등 조정 역할 수행을 중립적 혹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응답도 35.9%를 차지해, 갈등 조정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보통’ 이상의 응답이 약 60%를 상회 하였음. 연령별로도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보통’ 과 ‘그렇다’ 응답이 높은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거주지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적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음. 학력별로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졸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거주기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 응답이 높으나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는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의회의 갈등 조정 역할이 일정 부분 인식되지만, 시민 체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나타냄.
- 시사점으로는 첫째, 갈등 조정의 성과의 가시화가 필요함. 즉 단순한 절차적 역할 수행을 넘어 실제 합의 도출 사례 및 분쟁 해결의 경험을 시민들에게 환류하여 의회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대 및 거주기간별 차이를 반영하여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젊은 세대와 신규거주자에게는 제도의 정착과 지속성 확보를 강조하고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에게는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제공이 필요해 보임.

〈표 25〉 갈등 조정 역할 수행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10 7.9%	35 27.8%	56 44.4%	22 17.5%	3 2.4%	126 100.0%	$\chi^2=.653$ df=4 p=.957
	남성	14 8.3%	47 27.8%	75 44.4%	31 18.3%	2 1.2%	169 100.0%	
	전체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7 6.9%	22 21.6%	53 52.0%	18 17.6%	2 2.0%	102 100.0%	$\chi^2=23.280$ df=16 p=.106
	30대	1 2.1%	10 21.3%	25 53.2%	10 21.3%	1 2.1%	47 100.0%	
	40대	6 13.6%	12 27.3%	15 34.1%	11 25.0%	0 0.0%	44 100.0%	
	50대	8 11.6%	26 37.7%	25 36.2%	10 14.5%	0 0.0%	69 100.0%	
	60대이상	2 6.1%	12 36.4%	13 39.4%	4 12.1%	2 6.1%	33 100.0%	
	전체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21 9.2%	66 28.8%	100 43.7%	40 17.5%	2 0.9%	229 100.0%	$\chi^2=6.077$ df=4 p=.193
	읍지역	3 4.5%	16 24.2%	31 47.0%	13 19.7%	3 4.5%	66 100.0%	
	전체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5 7.1%	23 32.9%	29 41.4%	12 17.1%	1 1.4%	70 100.0%	$\chi^2=9.680$ df=8 p=.288
	대졸	15 7.7%	46 23.6%	91 46.7%	39 20.0%	4 2.1%	195 100.0%	
	대학원 졸	4 13.3%	13 43.3%	11 36.7%	2 6.7%	0 0.0%	30 100.0%	
	전체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2 3.3%	11 18.0%	29 47.5%	18 29.5%	1 1.6%	61 100.0%	$\chi^2= 16.293$ df=12 p=.178
	10-20년	2 4.3%	15 31.9%	20 42.6%	10 21.3%	0 0.0%	47 100.0%	
	20-30년	8 9.3%	25 29.1%	41 47.7%	10 11.6%	2 2.3%	86 100.0%	
	30년 이상	12 11.9%	31 30.7%	41 40.6%	15 14.9%	2 2.0%	101 100.0%	
	전체	24 8.1%	82 27.8%	131 44.4%	53 18.0%	5 1.7%	295 100.0%	

2)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2%가 ‘보통’, 16.3%가 ‘그렇다’, 2.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응답도 31.9%에 달해, 책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임.
-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연령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0대는 ‘보통’ 과 ‘그렇다’ 응답이 높아 제도 운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40대와 50대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세대별 경험과 기대치가 상이함을 보여줌.
- 거주지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적 인식을 다소 높게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학력별 분석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원 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 응답이 40%를 차지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드러났음.
- 거주기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다만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지만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이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뚜렷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학력,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비판적 인식은 정책 결정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위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둘째, 장기 거주자와 고학력 집단에서 비판적 인식이 높기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의 제공이 필요함.

<표 26>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5 11.9%	28 22.2%	60 47.6%	21 16.7%	2 1.6%	126 100.0%	$\chi^2=2.504$ df=4 p=.644
	남성	13 7.7%	38 22.5%	85 50.3%	27 16.0%	6 3.6%	169 100.0%	
	전체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8 7.8%	19 18.6%	57 55.9%	15 14.7%	3 2.9%	102 100.0%	$\chi^2=18.664$ df=16 p=.286
	30대	2 4.3%	6 12.8%	29 61.7%	8 17.0%	2 4.3%	47 100.0%	
	40대	8 18.2%	10 22.7%	17 38.6%	9 20.5%	0 0.0%	44 100.0%	
	50대	8 11.6%	21 30.4%	28 40.6%	10 14.5%	2 2.9%	69 100.0%	
	60대이상	2 6.1%	10 30.3%	14 42.4%	6 18.2%	1 3.0%	33 100.0%	
	전체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26 11.4%	52 22.7%	112 48.9%	33 14.4%	6 2.6%	229 100.0%	$\chi^2=6.013$ df=4 p=.198
	읍지역	2 3.0%	14 21.2%	33 50.0%	15 22.7%	2 3.0%	66 100.0%	
	전체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19 27.1%	29 41.4%	14 20.0%	3 4.3%	70 100.0%	$\chi^2=14.256$ df=8 p=.075
	대졸	19 9.7%	35 17.9%	104 53.3%	33 16.9%	4 2.1%	195 100.0%	
	대학원 졸	4 13.3%	12 40.0%	12 40.0%	1 3.3%	1 3.3%	30 100.0%	
	전체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9 14.8%	35 57.4%	11 18.0%	4 6.6%	61 100.0%	$\chi^2= 15.224$ df=12 p=.229
	10-20년	3 6.4%	14 29.8%	19 40.4%	10 21.3%	1 2.1%	47 100.0%	
	20-30년	10 11.6%	19 22.1%	44 51.2%	11 12.8%	2 2.3%	86 100.0%	
	30년 이상	13 12.9%	24 23.8%	47 46.5%	16 15.8%	1 1.0%	101 100.0%	
	전체	28 9.5%	66 22.4%	145 49.2%	48 16.3%	8 2.7%	295 100.0%	

3)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1%가 ‘보통’, 20.3%가 ‘그렇다’, 2.4%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진주시의회의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을 중립적 혹은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응답도 30.2%에 달해 긍정과 부정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에서 ‘보통’ 과 ‘그렇다’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연령별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대 이하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지만,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 세대별 인식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음.
- 거주지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음. 학력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졸 집단은 ‘보통’ 이상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졸 집단은 ‘그렇지 않다’ 응답이 36.7%로 상대적으로 비판적 인식을 보였음.
- 거주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다만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 응답이 높았지만 30년 이상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상의 결과는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보통 수준’ 으로 평가하여 의회의 정책 반영 노력을 뚜렷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연령, 학력, 거주기간 등 일부 집단에서는 비판적 인식이 높아 정책 반영 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시민의 체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7>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12 9.5%	28 22.2%	56 44.4%	28 22.2%	2 1.6%	126 100.0%	$\chi^2=2.133$ df=4 p=.711
	남성	11 6.5%	38 22.5%	83 49.1%	32 18.9%	5 3.0%	169 100.0%	
	전체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6 5.9%	17 16.7%	51 50.0%	25 24.5%	3 2.9%	102 100.0%	$\chi^2=16.135$ df=16 p=.444
	30대	2 4.3%	9 19.1%	22 46.8%	13 27.7%	1 2.1%	47 100.0%	
	40대	6 13.6%	9 20.5%	22 50.0%	7 15.9%	0 0.0%	44 100.0%	
	50대	6 8.7%	19 27.5%	33 47.8%	9 13.0%	2 2.9%	69 100.0%	
	60대이상	3 9.1%	12 36.4%	11 33.3%	6 18.2%	1 3.0%	33 100.0%	
	전체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21 9.2%	53 23.1%	107 46.7%	44 19.2%	4 1.7%	229 100.0%	$\chi^2=5.111$ df=4 p=.276
	읍지역	2 3.0%	13 19.7%	32 48.5%	16 24.2%	3 4.5%	66 100.0%	
	전체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5 7.1%	15 21.4%	33 47.1%	15 21.4%	2 2.9%	70 100.0%	$\chi^2=10.349$ df=8 p=.241
	대졸	17 8.7%	40 20.5%	89 45.6%	44 22.6%	5 2.6%	195 100.0%	
	대학원 졸	1 3.3%	11 36.7%	17 56.7%	1 3.3%	0 0.0%	30 100.0%	
	전체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2 3.3%	8 13.1%	31 50.8%	16 26.2%	4 6.6%	61 100.0%	$\chi^2=20.521$ df=12 p=.058
	10-20년	3 6.4%	12 25.5%	18 38.3%	12 25.5%	2 4.3%	47 100.0%	
	20-30년	7 8.1%	18 20.9%	42 48.8%	19 22.1%	0 0.0%	86 100.0%	
	30년 이상	11 10.9%	28 27.7%	48 47.5%	13 12.9%	1 1.0%	101 100.0%	
	전체	23 7.8%	66 22.4%	139 47.1%	60 20.3%	7 2.4%	295 100.0%	

4)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5%가 ‘보통’, 16.9%가 ‘그렇다’, 1.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과반이 진주시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중립적 혹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반면 부정적 응답도 28.9%를 차지해, 기능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 이상의 응답이 65% 안팎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20대 이하와 30대는 보통 이상의 응답이 많아 긍정적 인식이 많았지만, 40대와 50대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간 인식 차이가 일부 나타남.
- 거주지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 인식이 높았음. 즉 읍면지역에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학력, 거주기간별로도 유의하지 않았음.
- 이상의 결과는 진주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제도적으로는 일정 부분 인식되지만, 시민들 다수는 뚜렷한 성과보다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읍면지역은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지역은 체감도가 낮음. 이는 의회의 운영 성과가 균등하게 확산되지 못함을 보여줌.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견제 기능의 체감도 제고가 필요해 보임.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경험을 참고하여 동지역에서도 성과를 환류하고 소통 경로를 다양화해야 함. 둘째, 세대별 인식 차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됨. 청년층의 긍정적 태도를 제도적 참여로 제도화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비판적 인식에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과 가시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감시·견제 기능의 실질적 성과 축적과 홍보가 필요함.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제공을 통해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표 28〉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9 7.1%	31 24.6%	63 50.0%	22 17.5%	1 0.8%	126 100.0%	$\chi^2=2.474$ df=4 p=.649
	남성	13 7.7%	32 18.9%	92 54.4%	28 16.6%	4 2.4%	169 100.0%	
	전체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3 2.9%	16 15.7%	64 62.7%	18 17.6%	1 1.0%	102 100.0%	$\chi^2=24.938$ df=16 p=.071
	30대	2 4.3%	10 21.3%	25 53.2%	10 21.3%	0 0.0%	47 100.0%	
	40대	8 18.2%	8 18.2%	17 38.6%	10 22.7%	1 2.3%	44 100.0%	
	50대	7 10.1%	20 29.0%	31 44.9%	9 13.0%	2 2.9%	69 100.0%	
	60대이상	2 6.1%	9 27.3%	18 54.5%	3 9.1%	1 3.0%	33 100.0%	
	전체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9 8.3%	55 24.0%	120 52.4%	32 14.0%	3 1.3%	229 100.0%	$\chi^2=10.607$ df=4 p=.031
	읍지역	3 4.5%	8 12.1%	35 53.0%	18 27.3%	2 3.0%	66 100.0%	
	전체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3 4.3%	12 17.1%	42 60.0%	11 15.7%	2 2.9%	70 100.0%	$\chi^2=5.385$ df=8 p=.716
	대졸	16 8.2%	43 22.1%	99 50.8%	35 17.9%	2 1.0%	195 100.0%	
	대학원 졸	3 10.0%	8 26.7%	14 46.7%	4 13.3%	1 3.3%	30 100.0%	
	전체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1 1.6%	8 13.1%	37 60.7%	15 24.6%	0 0.0%	61 100.0%	$\chi^2= 18.808$ df=12 p=.093
	10-20년	3 6.4%	9 19.1%	25 53.2%	10 21.3%	0 0.0%	47 100.0%	
	20-30년	5 5.8%	23 26.7%	43 50.0%	13 15.1%	2 2.3%	86 100.0%	
	30년 이상	13 12.9%	23 22.8%	50 49.5%	12 11.9%	3 3.0%	101 100.0%	
	전체	22 7.5%	63 21.4%	155 52.5%	50 16.9%	5 1.7%	295 100.0%	

6.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 분석

〈표 29〉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이해당사자 상호신뢰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소각장 위치 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응답이 각각 43.1%로 가장 많았고 긍정 응답은 이해당사자 상호신뢰가 21.7%, 의사결정 신뢰는 22.4%로 나타남.
- 그러나 부정적 응답은 이해당사자 상호신뢰는 35.3%, 의사결정과정 신뢰는 3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이는 시민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불신도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함을 보여줌.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함.
-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상호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 강화가 필요함. 단순한 일회성 협의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가 필요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보의 접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시민들이 정책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임. 있음. 셋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중재 메커니즘이 필요함. 갈등이 내재된 상황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를 통하여 합의 형성과 조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는 전체 평균 2.82로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이하로 평가됨. 이는 이해관계자 상호신뢰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함. 즉 주민들이 의사소통과 협력 과정에서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평균 2.90)이 여성(평균 2.72)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였음. 연령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20대 이하(3.02)와 30대(2.97)는 보통 수준에 근접하거나 다소 긍정적인 반면, 40대(2.65)와 50대(2.61)는 낮은 수준을 보여 중장년층에서 신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2.86)이 동지역(2.81)보다 소폭 높았음.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학원졸 집단(2.55)에서 신뢰 인식도가 가장 낮아 고학력 집단일수록 비판적 태도를 보였음.
- 거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16으로 가장 긍정적인 반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62로 가장 낮았음. 오랜 거주자일수록 신뢰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위 결과는 이해당사자 상호신뢰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줌. 특히 연령 및 거주기간이 상호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젊은 세대와 신규거주자는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는 신뢰 수준이 낮기에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임.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맞춤형 소통,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함. 둘째, 소각장 사

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불신을 완화하고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함.

<표 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신뢰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722	0.878	-1.677	0.095
	남성	169	2.896	0.886		
	전체	295	2.809	0.882		
연령	20대이하	102	3.020	0.890	3.327	0.011
	30대	47	2.968	0.810		
	40대	44	2.648	0.886		
	50대	69	2.609	0.831		
	60대이상	33	2.682	0.959		
	전체	295	2.822	0.885		
거주지	동지역	229	2.810	0.880	-0.433	0.666
	읍지역	66	2.864	0.910		
	전체	295	2.837	0.895		
학력	고졸이하	70	2.914	0.901	1.816	0.165
	대졸	195	2.831	0.898		
	대학원 졸	30	2.550	0.723		
	전체	295	2.822	0.885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156	0.824	4.847	0.003
	10-20년	47	2.819	0.776		
	20-30년	86	2.826	0.923		
	30년 이상	101	2.619	0.886		
	전체	295	2.822	0.885		

1) 이해당사자 상호신뢰

- 이해당사자 상호신뢰는 응답자의 43.1%가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긍정 응답은 21.7%, 부정 응답은 35.3%이었음. 이는 이해당사자 상호신뢰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소극적 신뢰 인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등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즉 신뢰 수준은 특정 집단의 배경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음.
- 구체적으로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에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고, 40-50대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아 세대 차이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 거주지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학력별로도 집단 간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았음. 거주기간별로도 10년 미만 거주자의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다수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의 신뢰를 보이기에 진주시,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 공식적 협의 채널과 투명한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둘째, 세대 및 거주기간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청년층과 단기 거주자는 비교적 긍정적 신뢰를 보이지만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는 낮은 신뢰를 보임. 따라서 신뢰 회복을 위해 설명회, 참여 확대, 피드백 강화 정책이 필요해 보임.

<표 31> 이해당사자 상호신뢰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13 10.3%	38 30.2%	49 38.9%	25 19.8%	1 0.8%	126 100.0%	$\chi^2=7.361$ df=4 p=.118
	남성	12 7.1%	41 24.3%	78 46.2%	29 17.2%	9 5.3%	169 100.0%	
	전체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7 6.9%	20 19.6%	46 45.1%	22 21.6%	7 6.9%	102 100.0%	$\chi^2=21.072$ df=16 p=.176
	30대	4 8.5%	8 17.0%	23 48.9%	12 25.5%	0 0.0%	47 100.0%	
	40대	4 9.1%	14 31.8%	18 40.9%	8 18.2%	0 0.0%	44 100.0%	
	50대	6 8.7%	27 39.1%	26 37.7%	8 11.6%	2 2.9%	69 100.0%	
	60대이상	4 12.1%	10 30.3%	14 42.4%	4 12.1%	1 3.0%	33 100.0%	
	전체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18 7.9%	67 29.3%	97 42.4%	38 16.6%	9 3.9%	229 100.0%	$\chi^2=5.436$ df=4 p=.245
	읍지역	7 10.6%	12 18.2%	30 45.5%	16 24.2%	1 1.5%	66 100.0%	
	전체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4 5.7%	19 27.1%	29 41.4%	14 20.0%	4 5.7%	70 100.0%	$\chi^2=6.952$ df=8 p=.542
	대졸	19 9.7%	48 24.6%	85 43.6%	37 19.0%	6 3.1%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2 40.0%	13 43.3%	3 10.0%	0 0.0%	30 100.0%	
	전체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3 4.9%	13 21.3%	24 39.3%	18 29.5%	3 4.9%	61 100.0%	$\chi^2= 15.313$ df=12 p=.225
	10-20년	1 2.1%	13 27.7%	23 48.9%	9 19.1%	1 2.1%	47 100.0%	
	20-30년	8 9.3%	22 25.6%	40 46.5%	12 14.0%	4 4.7%	86 100.0%	
	30년 이상	13 12.9%	31 30.7%	40 39.6%	15 14.9%	2 2.0%	101 100.0%	
	전체	25 8.5%	79 26.8%	127 43.1%	54 18.3%	10 3.4%	295 100.0%	

2) 소각장 위치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 소각장 위치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43.1%가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긍정 응답은 22.4%, 부정 응답은 34.5%로 나타남.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임을 보여주며 긍정과 부정 인식이 혼재된 불안정한 상태임을 나타냄.
-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등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다만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높았음. 연령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긍정적이었으나 40-5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지별 차이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 보다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학력은 고졸 이하가 긍정 응답이 높았으나 대학원 졸업 집단은 부정 응답이 높았음. 거주기간별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긍정적 응답이 높으나 30년 이상 거주자는 부정적 응답이 높음.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시민 다수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식적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신뢰를 강화해야 함. 둘째, 연령 및 거주기간별 인식 차이가 있기에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주민토론회, 피드백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신뢰 회복이 필요함.

<표 32> 소각장 위치결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신뢰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3 10.3%	34 27.0%	54 42.9%	23 18.3%	2 1.6%	126 100.0%	$\chi^2=3.483$ df=4 p=.480
	남성	11 6.5%	44 26.0%	73 43.2%	33 19.5%	8 4.7%	169 100.0%	
	전체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22 21.6%	49 48.0%	18 17.6%	8 7.8%	102 100.0%	$\chi^2=24.985$ df=16 p=.070
	30대	2 4.3%	9 19.1%	23 48.9%	12 25.5%	1 2.1%	47 100.0%	
	40대	7 15.9%	12 27.3%	16 36.4%	9 20.5%	0 0.0%	44 100.0%	
	50대	6 8.7%	25 36.2%	28 40.6%	10 14.5%	0 0.0%	69 100.0%	
	60대이상	4 12.1%	10 30.3%	11 33.3%	7 21.2%	1 3.0%	33 100.0%	
	전체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8 7.9%	62 27.1%	100 43.7%	40 17.5%	9 3.9%	229 100.0%	$\chi^2=2.462$ df=4 p=.652
	읍지역	6 9.1%	16 24.2%	27 40.9%	16 24.2%	1 1.5%	66 100.0%	
	전체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3 4.3%	23 32.9%	25 35.7%	16 22.9%	3 4.3%	70 100.0%	$\chi^2=14.466$ df=8 p=.070
	대졸	19 9.7%	41 21.0%	92 47.2%	36 18.5%	7 3.6%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4 46.7%	10 33.3%	4 13.3%	0 0.0%	30 100.0%	
	전체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8 13.1%	30 49.2%	16 26.2%	5 8.2%	61 100.0%	$\chi^2= 19.179$ df=12 p=.084
	10-20년	4 8.5%	14 29.8%	21 44.7%	7 14.9%	1 2.1%	47 100.0%	
	20-30년	7 8.1%	22 25.6%	36 41.9%	18 20.9%	3 3.5%	86 100.0%	
	30년 이상	11 10.9%	34 33.7%	40 39.6%	15 14.9%	1 1.0%	101 100.0%	
	전체	24 8.1%	78 26.4%	127 43.1%	56 19.0%	10 3.4%	295 100.0%	

7.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 분석

〈표 33〉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 교류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공식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음. 첫째,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7%가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 응답은 26.1%, 부정적 응답은 33.2%로 나타났음. 이는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수준으로 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둘째,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 교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보통’ 으로 응답하여 절반 가까이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음. 긍정적 응답은 18.0%, 부정적 응답은 32.5%로 나타나, 이해당사자들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참여가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교류의 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셋째, 공식적 참여 창구 및 절차의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5%가 ‘보통’ 으로 응답했으며 긍정 응답은 16.9%, 부정 응답은 30.5%이었음. 즉 제도적인 참여 절차가 존재하지만,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위의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다수의 응답자가 참여 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참여의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둘째, 이해당사자 간 교류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간 정례 협의체 운영과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셋째, 공식적 참여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체감도가 낮기에 절차적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의 결과가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참여수준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762	0.760	-1.283	0.201
	남성	169	2.882	0.817		
	전체	295	2.822	0.788		
연령	20대이하	102	2.958	0.717	3.325	0.011
	30대	47	3.057	0.750		
	40대	44	2.652	0.835		
	50대	69	2.643	0.753		
	60대이상	33	2.748	0.983		
	전체	295	2.831	0.794		
거주지	동지역	229	2.796	0.775	-1.384	0.167
	읍지역	66	2.950	0.852		
	전체	295	2.873	0.813		
학력	고졸이하	70	2.862	0.775	4.287	0.015
	대졸	195	2.880	0.810		
	대학원 졸	30	2.433	0.626		
	전체	295	2.831	0.794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191	0.771	5.930	0.001
	10-20년	47	2.830	0.688		
	20-30년	86	2.744	0.732		
	30년 이상	101	2.687	0.847		
	전체	295	2.831	0.794		

-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 2.83점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이하의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은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평균 2.88점)이 여성(평균 2.76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반면, 연령별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음. 20대 이하(2.96점)와 30대(3.06점)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인식을 보인 반면, 40대(2.65점)와 50대(2.64점)는 낮게 나타나,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인식 격차가 드러남.
- 거주지별로 읍면지역 거주자는 2.95점으로 동지역 거주자 2.80점보다 참여 수준을 약간 높게 평가하였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원 졸업 집단이 2.43점으로 고졸 이하 2.86점, 대졸 2.88점 보다 현저히 낮은 참여 인식을 보임. 이는 고학력 집단일수록 제도적 참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거주기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19점으로 가장 높아 참여 인식이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는 2.69점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제도적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년층과 단기 거주자의 높은 참여 의향을 실질적인 참여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기회의 확대와 제도화가 필요해 보임. 둘째,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의 낮은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피드백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셋째, 고학력 집단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참여 채널을 마련하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검토한 결과,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거주지는 차이가 없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참여 인식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반면,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20대 이하(평균 2.96)와 30대(3.06)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인식을 보였으나, 40대(2.65), 50대(2.64), 60대 이상(2.75)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여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음. 이는 청년층이 정책 참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중장년층은 정책 참여의 실효성이나 제도적 한계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참여 인식이 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학력별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음. 특히 대학원 졸업 집단(평균 2.43)은 고졸 이하(2.86)나 대졸 집단(2.8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 인식을 보였음. 이는 고학력 집단이 제도적 참여의 한계를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 과정의 질적 측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
- 거주기간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19점으로 가장 높은 참여 인식을 보였으나, 30년 이상 거주자는 2.6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제도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불신 혹은 피로감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표 35〉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10 7.9%	40 31.7%	45 35.7%	29 23.0%	2 1.6%	126 100.0%	$\chi^2=5.112$ df=4 p=.276
	남성	13 7.7%	35 20.7%	75 44.4%	42 24.9%	4 2.4%	169 100.0%	
	전체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5 4.9%	21 20.6%	48 47.1%	23 22.5%	5 4.9%	102 100.0%	$\chi^2=29.697$ df=16 p=.020
	30대	2 4.3%	6 12.8%	24 51.1%	15 31.9%	0 0.0%	47 100.0%	
	40대	4 9.1%	11 25.0%	18 40.9%	11 25.0%	0 0.0%	44 100.0%	
	50대	7 10.1%	27 39.1%	22 31.9%	12 17.4%	1 1.4%	69 100.0%	
	60대이상	5 15.2%	10 30.3%	8 24.2%	10 30.3%	0 0.0%	33 100.0%	
	전체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16 7.0%	64 27.9%	91 39.7%	53 23.1%	5 2.2%	229 100.0%	$\chi^2=4.123$ df=4 p=.390
	읍지역	7 10.6%	11 16.7%	29 43.9%	18 27.3%	1 1.5%	66 100.0%	
	전체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6 8.6%	18 25.7%	26 37.1%	20 28.6%	0 0.0%	70 100.0%	$\chi^2=21.859$ df=8 p=.005
	대졸	15 7.7%	40 20.5%	86 44.1%	48 24.6%	6 3.1%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7 56.7%	8 26.7%	3 10.0%	0 0.0%	30 100.0%	
	전체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3 4.9%	5 8.2%	32 52.5%	18 29.5%	3 4.9%	61 100.0%	$\chi^2=26.899$ df=12 p=.008
	10-20년	1 2.1%	16 34.0%	17 36.2%	13 27.7%	0 0.0%	47 100.0%	
	20-30년	5 5.8%	27 31.4%	36 41.9%	16 18.6%	2 2.3%	86 100.0%	
	30년 이상	14 13.9%	27 26.7%	35 34.7%	24 23.8%	1 1.0%	101 100.0%	
	전체	23 7.8%	75 25.4%	120 40.7%	71 24.1%	6 2.0%	295 100.0%	

2)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

-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즉, 교류 수준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낮은 교류 인식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또한,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높은 교류 인식을 보였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표 36> 이해당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10 7.9%	33 26.2%	62 49.2%	20 15.9%	1 0.8%	126 100.0%	$\chi^2=3.545$ df=4 p=.471
	남성	8 4.7%	45 26.6%	84 49.7%	26 15.4%	6 3.6%	169 100.0%	
	전체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연령	20대이하	4 3.9%	20 19.6%	60 58.8%	16 15.7%	2 2.0%	102 100.0%	$\chi^2=20.991$ df=16 p=.179
	30대	2 4.3%	10 21.3%	22 46.8%	11 23.4%	2 4.3%	47 100.0%	
	40대	5 11.4%	15 34.1%	17 38.6%	6 13.6%	1 2.3%	44 100.0%	
	50대	3 4.3%	24 34.8%	34 49.3%	8 11.6%	0 0.0%	69 100.0%	
	60대이상	4 12.1%	9 27.3%	13 39.4%	5 15.2%	2 6.1%	33 100.0%	
	전체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4 6.1%	64 27.9%	115 50.2%	32 14.0%	4 1.7%	229 100.0%	$\chi^2=4.401$ df=4 p=.354
	읍지역	4 6.1%	14 21.2%	31 47.0%	14 21.2%	3 4.5%	66 100.0%	
	전체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16 22.9%	39 55.7%	10 14.3%	1 1.4%	70 100.0%	$\chi^2=12.039$ df=8 p=.149
	대졸	12 6.2%	47 24.1%	96 49.2%	34 17.4%	6 3.1%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5 50.0%	11 36.7%	2 6.7%	0 0.0%	30 100.0%	
	전체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1 1.6%	9 14.8%	32 52.5%	17 27.9%	2 3.3%	61 100.0%	$\chi^2= 18.912$ df=12 p=.091
	10-20년	3 6.4%	12 25.5%	26 55.3%	5 10.6%	1 2.1%	47 100.0%	
	20-30년	4 4.7%	28 32.6%	40 46.5%	13 15.1%	1 1.2%	86 100.0%	
	30년 이상	10 9.9%	29 28.7%	48 47.5%	11 10.9%	3 3.0%	101 100.0%	
	전체	18 6.1%	78 26.4%	146 49.5%	46 15.6%	7 2.4%	295 100.0%	

3) 공식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

- 공식적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에 대한 인식은 성별, 거주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연령, 거주지,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응답이 높았음. 특히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남성이 4.1%로 여성 0.8%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이 공식 절차 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로 응답 분포상으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비교적 긍정 응답이 많고, 40-50대는 부정 응답이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함.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다소 긍정적이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학력별로도 유의하지 않지만, 대학원 졸업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참여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 반면, 거주기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20점으로 참여 절차 마련에 대해 가장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20~30년(평균 2.80), 30년 이상(평균 2.67) 장기 거주자들은 낮은 인식을 나타내었음.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참여 절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피로감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표 37> 공식 참여 창구 및 절차 마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7 5.6%	39 31.0%	60 47.6%	19 15.1%	1 0.8%	126 100.0%	$\chi^2=15.446$ df=4 p=.004
	남성	19 11.2%	25 14.8%	95 56.2%	23 13.6%	7 4.1%	169 100.0%	
	전체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6 5.9%	17 16.7%	60 58.8%	16 15.7%	3 2.9%	102 100.0%	$\chi^2=19.257$ df=16 p=.256
	30대	3 6.4%	6 12.8%	26 55.3%	10 21.3%	2 4.3%	47 100.0%	
	40대	7 15.9%	10 22.7%	24 54.5%	3 6.8%	0 0.0%	44 100.0%	
	50대	7 10.1%	22 31.9%	31 44.9%	7 10.1%	2 2.9%	69 100.0%	
	60대이상	3 9.1%	9 27.3%	14 42.4%	6 18.2%	1 3.0%	33 100.0%	
	전체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20 8.7%	55 24.0%	120 52.4%	28 12.2%	6 2.6%	229 100.0%	$\chi^2=5.493$ df=4 p=.240
	읍지역	6 9.1%	9 13.6%	35 53.0%	14 21.2%	2 3.0%	66 100.0%	
	전체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15 21.4%	37 52.9%	12 17.1%	2 2.9%	70 100.0%	$\chi^2=6.476$ df=8 p=.594
	대졸	18 9.2%	40 20.5%	102 52.3%	29 14.9%	6 3.1%	195 100.0%	
	대학원 졸	4 13.3%	9 30.0%	16 53.3%	1 3.3%	0 0.0%	30 100.0%	
	전체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3 4.9%	8 13.1%	29 47.5%	16 26.2%	5 8.2%	61 100.0%	$\chi^2= 24.372$ df=12 p=.018
	10-20년	2 4.3%	11 23.4%	27 57.4%	7 14.9%	0 0.0%	47 100.0%	
	20-30년	9 10.5%	20 23.3%	48 55.8%	8 9.3%	1 1.2%	86 100.0%	
	30년 이상	12 11.9%	25 24.8%	51 50.5%	11 10.9%	2 2.0%	101 100.0%	
	전체	26 8.8%	64 21.7%	155 52.5%	42 14.2%	8 2.7%	295 100.0%	

8.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 분석

〈표 38〉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분위기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신뢰 기반 소통 및 협의 노력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는 협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제도화된 협력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첫째,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는 응답자의 42.7%가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긍정 응답은 19.6%, 부정 응답은 37.6%이었음. 이는 정보공유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공유 시스템이 부족하여 시민 체감도는 낮음을 의미함.
- 둘째,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분위기는 ‘보통’이 45.4%로서 가장 높았고 긍정 응답이 20.3%, 부정 응답은 34.3%로 나타남. 이는 협력적 분위기가 일정 수준 조성되어 있지만 응답자 다수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셋째, 신뢰 기반의 소통 및 협의 노력에서는 46.1%의 응답자가 ‘보통’으로 답했고 긍정 응답은 22.7%, 부정 응답은 31.2%이었음. 이는 신뢰 기반

의 소통이 일부 시도되고 있지만 상호 협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줌.

- 넷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보통’ 응답이 41.4%이었으며 긍정 응답은 19.6%, 부정 응답은 39.0%로 나타남. 이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함을 보여줌.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협력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둘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례적인 소통 채널의 마련, 참여 환류 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됨. 셋째, 협력적 네트워크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 및 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협력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도출되도록 해야 함.

〈표 3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이해당사자 간 협력수준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776	0.737	-0.534	0.594
	남성	169	2.827	0.866		
	전체	295	2.801	0.801		
연령	20대이하	102	2.902	0.749	2.423	0.048
	30대	47	2.995	0.835		
	40대	44	2.733	0.838		
	50대	69	2.583	0.801		
	60대이상	33	2.796	0.887		
	전체	295	2.805	0.812		
거주지	동지역	229	2.765	0.791	-1.572	0.117
	읍지역	66	2.943	0.875		
	전체	295	2.854	0.833		
학력	고졸이하	70	2.879	0.814	2.620	0.075
	대졸	195	2.827	0.831		
	대학원 졸	30	2.492	0.607		
	전체	295	2.805	0.812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094	0.831	3.958	0.009
	10-20년	47	2.867	0.683		
	20-30년	86	2.715	0.794		
	30년 이상	101	2.678	0.836		
	전체	295	2.805	0.812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거주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 먼저, 연령에서 20대 이하(2.90점)와 30대(3.00점)는 협력 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0대(2.73점)와 50대(2.58점)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청년층이 협력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중장년층은 제도적 협력의 실효성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을 보여줌.

- 또한, 거주기간별 차이에서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09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한 반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장기 거주자일수록 협력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반면, 성별, 거주지,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협력 인식을 보였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거주지별로는 읍지역(2.94점)이 동지역(2.77점)보다 협력 수준을 높게 평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음. 학력별로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학원 졸업 집단(2.49점)은 다른 집단보다 낮은 협력 인식을 보였음.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년층과 단기 거주자의 긍정적 협력 인식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 전략, 참여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협력 인식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제도화가 요구됨. 셋째, 고학력 집단의 낮은 참여 인식은 협력 과정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기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참여 채널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1)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

-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20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50대와 6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거주지별로도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음.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고, 20~30년 이상 거주자에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
-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정보공유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공유인식이 특정 집단의 배경 특성보다는 사업 전반의 제도적 구조나 정책 운영 방식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40> 거버넌스 주체 간 정보공유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8 6.3%	44 34.9%	52 41.3%	21 16.7%	1 0.8%	126 100.0%	$\chi^2=4.688$ df=4 p=.321
	남성	13 7.7%	46 27.2%	74 43.8%	29 17.2%	7 4.1%	169 100.0%	
	전체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29 28.4%	46 45.1%	20 19.6%	2 2.0%	102 100.0%	$\chi^2=15.921$ df=16 p=.459
	30대	2 4.3%	9 19.1%	23 48.9%	12 25.5%	1 2.1%	47 100.0%	
	40대	4 9.1%	13 29.5%	19 43.2%	7 15.9%	1 2.3%	44 100.0%	
	50대	6 8.7%	27 39.1%	28 40.6%	6 8.7%	2 2.9%	69 100.0%	
	60대이상	4 12.1%	12 36.4%	10 30.3%	5 15.2%	2 6.1%	33 100.0%	
	전체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4 6.1%	78 34.1%	95 41.5%	37 16.2%	5 2.2%	229 100.0%	$\chi^2=7.481$ df=4 p=.113
	읍지역	7 10.6%	12 18.2%	31 47.0%	13 19.7%	3 4.5%	66 100.0%	
	전체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24 34.3%	29 41.4%	10 14.3%	3 4.3%	70 100.0%	$\chi^2=5.647$ df=8 p=.687
	대졸	14 7.2%	54 27.7%	88 45.1%	34 17.4%	5 2.6%	195 100.0%	
	대학원 졸	3 10.0%	12 40.0%	9 30.0%	6 20.0%	0 0.0%	30 100.0%	
	전체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13 21.3%	25 41.0%	18 29.5%	3 4.9%	61 100.0%	$\chi^2= 19.159$ df=12 p=.085
	10-20년	2 4.3%	12 25.5%	25 53.2%	8 17.0%	0 0.0%	47 100.0%	
	20-30년	6 7.0%	33 38.4%	34 39.5%	11 12.8%	2 2.3%	86 100.0%	
	30년 이상	11 10.9%	32 31.7%	42 41.6%	13 12.9%	3 3.0%	101 100.0%	
	전체	21 7.1%	90 30.5%	126 42.7%	50 16.9%	8 2.7%	295 100.0%	

2) 이해당사자 간 협력 분위기

-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협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음. 거주기간별로도 단기 거주자가 장기 거주자보다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반면,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읍면지역 거주자는 평균 3.12점으로 동지역 거주자(2.97점)보다 협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그렇다’ 응답이 31.8%로, 동지역(14.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이는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41> 이해당사자 간 협력 분위기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 별	여성	4 3.2%	40 31.7%	59 46.8%	22 17.5%	1 0.8%	126 100.0%	$\chi^2=7.534$ df=4 p=.110
	남성	16 9.5%	41 24.3%	75 44.4%	32 18.9%	5 3.0%	169 100.0%	
	전체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연 령	20대이하	4 3.9%	25 24.5%	51 50.0%	19 18.6%	3 2.9%	102 100.0%	$\chi^2=19.999$ df=16 p=.220
	30대	1 2.1%	11 23.4%	22 46.8%	11 23.4%	2 4.3%	47 100.0%	
	40대	5 11.4%	9 20.5%	22 50.0%	8 18.2%	0 0.0%	44 100.0%	
	50대	9 13.0%	25 36.2%	24 34.8%	11 15.9%	0 0.0%	69 100.0%	
	60대이상	1 3.0%	11 33.3%	15 45.5%	5 15.2%	1 3.0%	33 100.0%	
	전체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거 주 지	동지역	16 7.0%	61 26.6%	113 49.3%	33 14.4%	6 2.6%	229 100.0%	$\chi^2=13.991$ df=4 p=.007
	읍지역	4 6.1%	20 30.3%	21 31.8%	21 31.8%	0 0.0%	66 100.0%	
	전체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학 력	고졸이하	4 5.7%	19 27.1%	29 41.4%	16 22.9%	2 2.9%	70 100.0%	$\chi^2=9.291$ df=8 p=.318
	대졸	14 7.2%	48 24.6%	93 47.7%	36 18.5%	4 2.1%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4 46.7%	12 40.0%	2 6.7%	0 0.0%	30 100.0%	
	전체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거 주 기 간	10년미만	2 3.3%	13 21.3%	30 49.2%	14 23.0%	2 3.3%	61 100.0%	$\chi^2=7.997$ df=12 p=.785
	10-20년	3 6.4%	11 23.4%	24 51.1%	8 17.0%	1 2.1%	47 100.0%	
	20-30년	5 5.8%	27 31.4%	35 40.7%	17 19.8%	2 2.3%	86 100.0%	
	30년 이상	10 9.9%	30 29.7%	45 44.6%	15 14.9%	1 1.0%	101 100.0%	
	전체	20 6.8%	81 27.5%	134 45.4%	54 18.3%	6 2.0%	295 100.0%	

3) 신뢰 기반 소통 및 협의 노력

- 신뢰 기반의 소통과 협의 노력에 대한 인식은 학력, 거주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학력별로 대학원 졸업자들이 평균 2.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졸 이하는 3.03점, 대졸은 2.99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고학력 집단이 제도적 소통 과정의 한계나 질적 부족을 더 비판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냄.
- 거주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15점으로 가장 높음.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평균 2.68점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단기 거주자는 협의 노력에 대해 기대와 긍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장기 거주자는 제도적 소통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어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거주지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음.

<표 42> 신뢰 기반 소통 및 협의 노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8 6.3%	28 22.2%	59 46.8%	29 23.0%	2 1.6%	126 100.0%	$\chi^2=7.378$ df=4 p=.117
	남성	15 8.9%	41 24.3%	77 45.6%	25 14.8%	11 6.5%	169 100.0%	
	전체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19 18.6%	52 51.0%	22 21.6%	4 3.9%	102 100.0%	$\chi^2=14.712$ df=16 p=.546
	30대	5 10.6%	7 14.9%	21 44.7%	10 21.3%	4 8.5%	47 100.0%	
	40대	4 9.1%	13 29.5%	18 40.9%	7 15.9%	2 4.5%	44 100.0%	
	50대	6 8.7%	23 33.3%	28 40.6%	11 15.9%	1 1.4%	69 100.0%	
	60대이상	3 9.1%	7 21.2%	17 51.5%	4 12.1%	2 6.1%	33 100.0%	
	전체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9 8.3%	53 23.1%	110 48.0%	38 16.6%	9 3.9%	229 100.0%	$\chi^2=3.350$ df=4 p=.501
	읍지역	4 6.1%	16 24.2%	26 39.4%	16 24.2%	4 6.1%	66 100.0%	
	전체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4 5.7%	14 20.0%	36 51.4%	11 15.7%	5 7.1%	70 100.0%	$\chi^2=17.628$ df=8 p=.024
	대졸	18 9.2%	41 21.0%	86 44.1%	42 21.5%	8 4.1%	195 100.0%	
	대학원 졸	1 3.3%	14 46.7%	14 46.7%	1 3.3%	0 0.0%	30 100.0%	
	전체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3 4.9%	8 13.1%	33 54.1%	10 16.4%	7 11.5%	61 100.0%	$\chi^2=21.672$ df=12 p=.041
	10-20년	1 2.1%	10 21.3%	22 46.8%	12 25.5%	2 4.3%	47 100.0%	
	20-30년	7 8.1%	24 27.9%	37 43.0%	17 19.8%	1 1.2%	86 100.0%	
	30년 이상	12 11.9%	27 26.7%	44 43.6%	15 14.9%	3 3.0%	101 100.0%	
	전체	23 7.8%	69 23.4%	136 46.1%	54 18.3%	13 4.4%	295 100.0%	

4)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력에서만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가 나타났음.
-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응답이 다소 많았지만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을 보면 30대에서 그렇다 응답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부정 응답이 49.3%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님.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보다 긍정 응답이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음.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20-30년 거주자는 2.74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 그러나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은 긍정 응답이 전혀 없었으며 전체의 93%가 ‘보통 이하’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음. 반면 고졸 이하와 대졸 집단은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고학력 집단이 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냄.

<표 43>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9 7.1%	45 35.7%	51 40.5%	20 15.9%	1 0.8%	126 100.0%	$\chi^2=5.590$ df=4 p=.232
	남성	16 9.5%	45 26.6%	71 42.0%	30 17.8%	7 4.1%	169 100.0%	
	전체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9 8.8%	26 25.5%	45 44.1%	18 17.6%	4 3.9%	102 100.0%	$\chi^2=12.235$ df=16 p=.728
	30대	4 8.5%	11 23.4%	19 40.4%	12 25.5%	1 2.1%	47 100.0%	
	40대	4 9.1%	14 31.8%	19 43.2%	6 13.6%	1 2.3%	44 100.0%	
	50대	6 8.7%	28 40.6%	27 39.1%	8 11.6%	0 0.0%	69 100.0%	
	60대이상	2 6.1%	11 33.3%	12 36.4%	6 18.2%	2 6.1%	33 100.0%	
	전체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22 9.6%	75 32.8%	91 39.7%	36 15.7%	5 2.2%	229 100.0%	$\chi^2=5.850$ df=4 p=.211
	읍지역	3 4.5%	15 22.7%	31 47.0%	14 21.2%	3 4.5%	66 100.0%	
	전체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2 2.9%	24 34.3%	28 40.0%	14 20.0%	2 2.9%	70 100.0%	$\chi^2=14.660$ df=8 p=.066
	대졸	21 10.8%	52 26.7%	80 41.0%	36 18.5%	6 3.1%	195 100.0%	
	대학원 졸	2 6.7%	14 46.7%	14 46.7%	0 0.0%	0 0.0%	30 100.0%	
	전체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3 4.9%	14 23.0%	23 37.7%	17 27.9%	4 6.6%	61 100.0%	$\chi^2=19.130$ df=12 p=.085
	10-20년	1 2.1%	18 38.3%	23 48.9%	4 8.5%	1 2.1%	47 100.0%	
	20-30년	11 12.8%	26 30.2%	35 40.7%	13 15.1%	1 1.2%	86 100.0%	
	30년 이상	10 9.9%	32 31.7%	41 40.6%	16 15.8%	2 2.0%	101 100.0%	
	전체	25 8.5%	90 30.5%	122 41.4%	50 16.9%	8 2.7%	295 100.0%	

9.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공동의사결정 수준 분석

〈표 44〉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공동의사결정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공동의사결정 실시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정책결정 책임공유 노력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동의사결정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실질적 단계로 충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분쟁 발생 시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해서 ‘보통’ 이 47.8%로 가장 많았고 긍정 응답은 26.1%, 부정 응답은 26.1%로 비슷하였음. 이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의미함.
- 둘째, 공동의사결정의 실시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51.2%의 응답자가 ‘보통’ 으로 응답하였고 긍정 응답은 23.4%, 부정 응답은 25.5%이었음. 이는 공동의사결정이 제도적으로 일부 작동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에게 체감되는 수준은 낮음을 의미함.

- 셋째, 정책 방향 및 대안의 공동 논의에서는 ‘보통’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긍정 응답은 23.8%, 부정 응답은 27.1%이었음. 이는 정책 대안 논의가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넷째,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의 공유 노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44.4%가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긍정 응답은 28.4%, 부정 응답은 27.1%이었음. 이는 책임 공유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항목보다 다소 긍정적이나 여전히 시민 다수는 중립적 태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함.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동의사결정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공동결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둘째, 분쟁 발생 시 합의 도출과 대안 논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구의 운영, 합의 형성 절차의 제도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 셋째,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공유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간 공동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공동의사결정 수준 인식도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여성	126	2.933	0.795	-0.560	0.576
	남성	169	2.987	0.842		
	전체	295	2.960	0.818		
연령	20대이하	102	3.054	0.775	1.327	0.260
	30대	47	3.101	0.892		
	40대	44	2.818	0.845		
	50대	69	2.855	0.767		
	60대이상	33	2.909	0.912		
	전체	295	2.964	0.821		
거주지	동지역	229	2.909	0.805	-2.123	0.035
	읍지역	66	3.152	0.855		
	전체	295	3.030	0.830		
학력	고졸이하	70	2.968	0.827	1.252	0.287
	대졸	195	2.996	0.844		
	대학원 졸	30	2.742	0.621		
	전체	295	2.964	0.821		
거주기간	10년미만	61	3.205	0.855	2.675	0.048
	10-20년	47	3.011	0.748		
	20-30년	86	2.901	0.736		
	30년 이상	101	2.849	0.879		
	전체	295	2.964	0.821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와 거주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 거주지별로 보면 읍면지역 거주자는 3.15점으로 동지역 거주자 2.91점보다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높게 평가함. 이는 읍면지역에서 시민 간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3.21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며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85점으로 가장 낮음. 이는 단기 거주자의 경

우 제도적 참여와 공동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와 긍정적 태도를 보이나 장기 거주자는 정책 참여 과정에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은 30대가 3.10점, 20대 이하가 3.0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40대는 2.82점, 50대 2.8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학력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대학원 졸업 집단이 2.74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 협력 과정의 질적 측면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위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동의사결정의 수준이 ‘보통 수준’ 이기에 실질적인 공동결정 경험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 거주자의 낮은 인식은 제도 참여의 신뢰성 부족과 관련될 수 있기에 맞춤형 소통 전략, 환류(feedback) 체계 마련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

-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거주기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 거주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거주자가 평균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11.5%로 다른 집단보다 두드러졌음.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평균 2.86점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장기 거주자일수록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도 20와 3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50와 6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다소 많았음.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동지역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음. 학력별로도 대학원 졸업 집단이 다소 낮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46〉 분쟁 시 합의 도출 노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7 5.6%	29 23.0%	57 45.2%	28 22.2%	5 4.0%	126 100.0%	$\chi^2=3.032$ df=4 p=.553
	남성	13 7.7%	28 16.6%	84 49.7%	34 20.1%	10 5.9%	169 100.0%	
	전체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17 16.7%	49 48.0%	25 24.5%	6 5.9%	102 100.0%	$\chi^2=16.495$ df=16 p=.419
	30대	3 6.4%	7 14.9%	23 48.9%	11 23.4%	3 6.4%	47 100.0%	
	40대	4 9.1%	12 27.3%	19 43.2%	8 18.2%	1 2.3%	44 100.0%	
	50대	4 5.8%	19 27.5%	30 43.5%	14 20.3%	2 2.9%	69 100.0%	
	60대이상	4 12.1%	2 6.1%	20 60.6%	4 12.1%	3 9.1%	33 100.0%	
	전체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5 6.6%	52 22.7%	106 46.3%	45 19.7%	11 4.8%	229 100.0%	$\chi^2=7.706$ df=4 p=.103
	읍지역	5 7.6%	5 7.6%	35 53.0%	17 25.8%	4 6.1%	66 100.0%	
	전체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13 18.6%	32 45.7%	16 22.9%	4 5.7%	70 100.0%	$\chi^2=9.747$ df=8 p=.283
	대졸	15 7.7%	33 16.9%	95 48.7%	41 21.0%	11 5.6%	195 100.0%	
	대학원 졸	0 0.0%	11 36.7%	14 46.7%	5 16.7%	0 0.0%	30 100.0%	
	전체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4 6.6%	5 8.2%	29 47.5%	16 26.2%	7 11.5%	61 100.0%	$\chi^2=21.999$ df=12 p=.038
	10-20년	1 2.1%	13 27.7%	21 44.7%	11 23.4%	1 2.1%	47 100.0%	
	20-30년	3 3.5%	20 23.3%	43 50.0%	18 20.9%	2 2.3%	86 100.0%	
	30년 이상	12 11.9%	19 18.8%	48 47.5%	17 16.8%	5 5.0%	101 100.0%	
	전체	20 6.8%	57 19.3%	141 47.8%	62 21.0%	15 5.1%	295 100.0%	

2) 공동의사결정 실시

-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음. 연령별로도 20와 30대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40와 50대에서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별로도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음. 거주기간별로도 10년 미만 거주자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거주지별 응답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차이가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음. 읍면지역의 경우 ‘그렇다’ 응답이 31.8%로 동지역(16.6%)보다 뚜렷하게 높아, 읍면지역 시민들이 공동의사결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읍면지역의 지역 사회 구조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교적 긴밀하게 작동하는 가능성을 시사함.
- 연령·학력·거주기간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체 시민을 포괄하는 공동의사결정 제도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표 47> 공동의사결정 실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7 5.6%	28 22.2%	60 47.6%	29 23.0%	2 1.6%	126 100.0%	$\chi^2=4.405$ df=4 p=.354
	남성	10 5.9%	30 17.8%	91 53.8%	30 17.8%	8 4.7%	169 100.0%	
	전체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연령	20대이하	4 3.9%	21 20.6%	50 49.0%	22 21.6%	5 4.9%	102 100.0%	$\chi^2=10.708$ df=16 p=.827
	30대	3 6.4%	6 12.8%	25 53.2%	11 23.4%	2 4.3%	47 100.0%	
	40대	4 9.1%	10 22.7%	20 45.5%	9 20.5%	1 2.3%	44 100.0%	
	50대	4 5.8%	17 24.6%	36 52.2%	12 17.4%	0 0.0%	69 100.0%	
	60대이상	2 6.1%	4 12.1%	20 60.6%	5 15.2%	2 6.1%	33 100.0%	
	전체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4 6.1%	49 21.4%	121 52.8%	38 16.6%	7 3.1%	229 100.0%	$\chi^2=8.606$ df=4 p=.072
	읍지역	3 4.5%	9 13.6%	30 45.5%	21 31.8%	3 4.5%	66 100.0%	
	전체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3 4.3%	14 20.0%	38 54.3%	13 18.6%	2 2.9%	70 100.0%	$\chi^2=10.994$ df=8 p=.202
	대졸	13 6.7%	33 16.9%	97 49.7%	44 22.6%	8 4.1%	195 100.0%	
	대학원 졸	1 3.3%	11 36.7%	16 53.3%	2 6.7%	0 0.0%	30 100.0%	
	전체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2 3.3%	9 14.8%	32 52.5%	14 23.0%	4 6.6%	61 100.0%	$\chi^2=13.576$ df=12 p=.329
	10-20년	1 2.1%	14 29.8%	21 44.7%	10 21.3%	1 2.1%	47 100.0%	
	20-30년	4 4.7%	14 16.3%	51 59.3%	15 17.4%	2 2.3%	86 100.0%	
	30년 이상	10 9.9%	21 20.8%	47 46.5%	20 19.8%	3 3.0%	101 100.0%	
	전체	17 5.8%	58 19.7%	151 51.2%	59 20.0%	10 3.4%	295 100.0%	

3)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

- 정책 방향 및 대안의 공동 논의 수준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즉, 정책 방향 및 대안에 대한 공동 논의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응답 분포를 보면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 응답이 절반 가까이지만 ‘매우 그렇다’ 응답이 남성은 5.3%, 여성은 2.4%로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에서는 30대가 10.6%, 60대 이상이 6.1%가 ‘매우 그렇다’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은 그렇다 응답이 28.8%, 동지역은 17.0%로서 읍면 지역 시민들이 공동논의 과정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 인식을 보임.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36.7%로 높게 나타나 협의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비판적임.
- 이상에 결과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구조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48>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9 7.1%	27 21.4%	62 49.2%	25 19.8%	3 2.4%	126 100.0%	$\chi^2=1.767$ df=4 p=.779
	남성	12 7.1%	32 18.9%	83 49.1%	33 19.5%	9 5.3%	169 100.0%	
	전체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20 19.6%	51 50.0%	23 22.5%	3 2.9%	102 100.0%	$\chi^2=14.801$ df=16 p=.539
	30대	3 6.4%	6 12.8%	24 51.1%	9 19.1%	5 10.6%	47 100.0%	
	40대	5 11.4%	10 22.7%	19 43.2%	10 22.7%	0 0.0%	44 100.0%	
	50대	4 5.8%	16 23.2%	35 50.7%	12 17.4%	2 2.9%	69 100.0%	
	60대이상	4 12.1%	7 21.2%	16 48.5%	4 12.1%	2 6.1%	33 100.0%	
	전체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8 7.9%	49 21.4%	114 49.8%	39 17.0%	9 3.9%	229 100.0%	$\chi^2=5.522$ df=4 p=.238
	읍지역	3 4.5%	10 15.2%	31 47.0%	19 28.8%	3 4.5%	66 100.0%	
	전체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13 18.6%	36 51.4%	12 17.1%	4 5.7%	70 100.0%	$\chi^2=9.461$ df=8 p=.305
	대졸	16 8.2%	35 17.9%	95 48.7%	41 21.0%	8 4.1%	195 100.0%	
	대학원 졸	0 0.0%	11 36.7%	14 46.7%	5 16.7%	0 0.0%	30 100.0%	
	전체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3 4.9%	8 13.1%	29 47.5%	16 26.2%	5 8.2%	61 100.0%	$\chi^2= 14.121$ df=12 p=.293
	10-20년	2 4.3%	13 27.7%	18 38.3%	12 25.5%	2 4.3%	47 100.0%	
	20-30년	6 7.0%	18 20.9%	48 55.8%	12 14.0%	2 2.3%	86 100.0%	
	30년 이상	10 9.9%	20 19.8%	50 49.5%	18 17.8%	3 3.0%	101 100.0%	
	전체	21 7.1%	59 20.0%	145 49.2%	58 19.7%	12 4.1%	295 100.0%	

4) 정책 결정 책임 공유 노력

-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의 공유 노력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즉, 책임 공유 노력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하였음.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음.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그렇다’ 응답이 30.3%로 동지역(23.1%)보다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낮았음.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 거주자의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았으나, 장기 거주자일수록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긍정 응답이 비교적 높은 집단인 단기 거주자와 청년층의 경험을 제도적으로 확산시켜, 책임 공유의 참여 문화를 지역 전반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표 49> 정책 결정 책임 공유 노력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df, p
성별	여성	8 6.3%	26 20.6%	59 46.8%	30 23.8%	3 2.4%	126 100.0%	$\chi^2=1.666$ df=4 p=.797
	남성	13 7.7%	33 19.5%	72 42.6%	43 25.4%	8 4.7%	169 100.0%	
	전체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연령	20대이하	5 4.9%	18 17.6%	46 45.1%	28 27.5%	5 4.9%	102 100.0%	$\chi^2=18.008$ df=16 p=.323
	30대	4 8.5%	6 12.8%	21 44.7%	13 27.7%	3 6.4%	47 100.0%	
	40대	4 9.1%	9 20.5%	19 43.2%	12 27.3%	0 0.0%	44 100.0%	
	50대	4 5.8%	19 27.5%	29 42.0%	17 24.6%	0 0.0%	69 100.0%	
	60대이상	4 12.1%	7 21.2%	16 48.5%	3 9.1%	3 9.1%	33 100.0%	
	전체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거주지	동지역	16 7.0%	52 22.7%	100 43.7%	53 23.1%	8 3.5%	229 100.0%	$\chi^2=5.115$ df=4 p=.276
	읍지역	5 7.6%	7 10.6%	31 47.0%	20 30.3%	3 4.5%	66 100.0%	
	전체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학력	고졸이하	5 7.1%	15 21.4%	32 45.7%	15 21.4%	3 4.3%	70 100.0%	$\chi^2=8.213$ df=8 p=.413
	대졸	15 7.7%	34 17.4%	84 43.1%	54 27.7%	8 4.1%	195 100.0%	
	대학원 졸	1 3.3%	10 33.3%	15 50.0%	4 13.3%	0 0.0%	30 100.0%	
	전체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거주기간	10년미만	4 6.6%	4 6.6%	32 52.5%	18 29.5%	3 4.9%	61 100.0%	$\chi^2= 17.779$ df=12 p=.123
	10-20년	1 2.1%	10 21.3%	17 36.2%	17 36.2%	2 4.3%	47 100.0%	
	20-30년	6 7.0%	24 27.9%	36 41.9%	17 19.8%	3 3.5%	86 100.0%	
	30년 이상	10 9.9%	21 20.8%	46 45.5%	21 20.8%	3 3.0%	101 100.0%	
	전체	21 7.1%	59 20.0%	131 44.4%	73 24.7%	11 3.7%	295 100.0%	

VI. 지방정부 간 광역 폐기물 처리 협력 성공 사례

1.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협력 모델

- 지방정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가장 침해하고 고질적인 갈등 현안 중 하나임. 인구와 생활 수준의 증가로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혐오시설 인식 때문에 신규 시설의 건립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많은 지방정부는 노후화된 시설에 의존하거나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김해-진해 광역소각장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한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임. 김해시와 창원시(진해구)는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후시설, 용량 부족, 재정 압박이라는 삼중고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전략적 접근으로 이를 해소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 특히 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사업은 단순한 시설 증설이 아닌, 지자체가 직면한 재정적, 환경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 사업의 추진 배경을 통해서 성공을 견인한 핵심 동인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의 한계(창원시의회 임시회, 2018.10.29.)
 - 사업 추진 당시 김해시와 창원시(진해구)는 각각 기존 소각 시설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

- 김해시: 기존 장유 소각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150톤에 불과했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이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용량을 300톤/일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음.
- 창원시(진해구): 하루 70톤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2005년의 건립 이후 노후화된 소각로의 처리 능력이 300톤에 그쳐서 초과된 폐기물의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
- 두 지역 모두 시설의 현대화와 증설이 급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의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2) 광역 협력형 효율화 전략

- 이러한 배경에서 김해시는 시설의 개선을 단독이 아니라 광역화로 추진하였음. 정부의 광역처리 시설의 활성화 정책에 맞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강력한 재정지원의 혜택이 주된 동력이었음.
- 광역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총 874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에서 70%(612억 원)를 국가와 도 차원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할 수 있었음.
- 재정 지원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고 진해구의 하루 50톤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창원시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이러한 전략은 김해시에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창원시(진해구)에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안을 동시에 제공하는 상생의 틀을 마련하였음. 즉 명확한 필요성과 전략적 판단으로 김해-진해 사업은 주민반대와 법적 분쟁이라는 현실적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음.

3) 성공적 갈등 해결 과정 분석

- 김해-진해 사업은 기획부터 주민과의 갈등, 법적 분쟁의 해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었음.
- 추진 경과 및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음(한국경제, 2024.7.16.)

〈표 50〉 추진 경과 및 주요 의사결정과정

<p>■ 2018. 10-11월: 제도적 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창원 ‘광역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2018.10.5.) ○ 김해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 ○ 사업의 법적, 재정적 기틀의 확립
<p>■ 2019-2022년: 갈등 병행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 ○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됨 ○ 갈등관리와 사업 추진이 병행됨
<p>■ 2022년: 추진 동력 재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약 및 재검토 공방 ○ 김해-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공식화함
<p>■ 2024. 7월: 법적 불확실성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1심 기각 판결 ○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항소를 포기, 해산 ○ 장기간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
<p>■ 2026년(자원순환시설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 자체 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

4)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장유 자원 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의 위치 및 조감도 정보

- 시설 위치
- 사업 대상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 자원순환시설 일원
- 지번 주소(기존시설): 김해시 부곡로 35

■ 광역화 사업 부지: 김해시 부곡동 490 일원에 소각시설 증설 및 주민 편의 시설 조성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기존150t/일 규모)의 현대화(증설), 창원시(진해구)는 생활폐기물 일부(50t/일)를 공동처리하는 광역화 사업 추진

○ 시설 특징(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 주요시설: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하루 300t 규모로 확충, 최신 환경설비를 갖춘 소각시설

■ 주민 편의시설: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소각장 시설외에 복합 스포츠센터가 건립됨. 조감도에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포함됨

■ 특징: 단순히 쓰레기처리 기능 외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기존 장유 다누림센터, 탄소중립체험관 등)과 연계된 복합 환경 시설의 형태로 디자인됨(경남일보, 2025.1.2.)

<그림 3>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5) 재정 분담 구조의 확립

- 사업의 안정성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에 기반하였음. 광역화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여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점이 특징임(경남일보, 2025.1.2.)

<표 51> 협력 구조 및 재정 분담

구분	분담 비율	분담 금액	비고
국·도비	70%	약 612억 원	광역화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김해시	25%	약 218.5억 원	시설 수용 지자체
창원시	5%	약 43.5억 원	폐기물 반출 지자체
합계	100%	약 874억 원	

- 명확한 재정 분담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6)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

-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사업 추진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지만 2024년 7월 법원의 주민패소 판결로서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
- 즉 이 판결로써 사업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음.
- 즉 반대 여론을 종식시키고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공사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함.

7) 김해-진해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 도출

-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광역 협력의 토대 구축
 - 총사업비의 70%에 달하는 국·도비 지원은 김해시와 창원시(진해구)의 협력을 이끌어 낸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촉매제로 볼 수 있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광역 협력’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였음.

- 이러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정치적 입장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구체적 수치 합의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완화

- 확실한 재정적 유인책으로 양 지방정부는 합의사항을 검증가능한 수치로 문서화했음. 창원(진해)폐기물 50t/일, 비용분담 김해 25%, 창원 5%로서 수치화된 약속을 함.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과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용함.

○ 법적 결정을 통하여 행정의 추진 동력 확보

- 행정소송의 기각 판결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재정적 또는 정량적 합의 내용을 이행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이 판결로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음. 즉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업을 후퇴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시킴. 즉 갈등국면에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사업 추진력 확보의 핵심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중복 투자 해소라는 공유 비전 제시

- 이렇게 확보된 법적 정당성은 미래 비전을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만들게 됨. 경남도의회 회의록에서 장유 광역소각장 완공시 진해의 노후 소각장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됨(경남도의회 회의록, 2024)
- 이는 신규 시설의 건립이 김해 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박처리가 아니라 권역 전체의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환경 기반시설을 최적화한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됨.

2. 김해-진해 사례를 통한 진주시 정책 제안

1) 제안 1: 광역 협력 모델의 조기 설계 및 제도화

- 진주시는 현재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내동면)의 매립 기한 문제와 인접한 사천시와의 광역 소각장 공동 추진 무산으로 독자적인 소각시설(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KBS뉴스, 2025.06.12.).
- 사천시와의 광역 소각장 공동 추진 무산 이후 독자 노선을 걷고 있지만 비용 및 부지확보 난이도를 고려하여 인근 지자체(사천, 산청, 하동 등)와 광역 소각장 설치 협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주시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 일방적 행정이 주요한 갈등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김해-진해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주민편익시설, 재정 지원 등)를 제시하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과정이 필요함.
- 김해-진해 사례처럼 기본 협약(수치 명시)-> 양 시·군의회 동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정권이나 여론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절차임.

2) 제안 2: 선제적 법률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김해시가 수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 지연을 겪었던 점을 볼 때 진주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적 법률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리스크 맵’을 작성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통하여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3) 제안 3: 중복시설의 정리 로드맵을 연계한 수용성 제고

- 신규 광역시설 건립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인근 지역의 노후 및 비효율적인 기존 시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미래 로드맵을 반드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시설 건립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권역 전체의 환경기반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임을 알려서 주민의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임.

4) 제안 4: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 주민과의 소통에서 필요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당위성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움. 김해-진해 사례처럼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예상처리량 ○○t/일, 총사업비 ○○억 원, 국·도비 확보 ○○%, 준공 목표 ○○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 및 역할분담으로 소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략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김해-진해 광역 소각장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더 이상 단독 추진의 한계에 갇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기 보다, 상생의 광역협력 모델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임.

Ⅶ. 진주시 거버넌스의 문제점 진단

1. 참여 주체별 문제점

(1) 시민·시민단체

- 진주시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수준은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40% 내외)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응답은 20%에 불과하였음. 그리고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교류가 일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장기 거주와 및 고학력 집단에서는 참여에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 이는 제도적 참여의 경험이 반복되며 기대치가 낮아지고 제도적인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됨. 또한 시민단체의 정책 대안 제시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볼 수 있음. 이는 시민단체가 정보의 접근성 부족과 전문적인 분석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약되는 구조적인 한계로 나타날 수 있음.

(2) 진주시

- 진주시는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소통 창구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진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보통이하’로 나타남. 또한 정보 공유, 신뢰 기반 소통과 협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응답이 모두 중립적 수준으로 나타났음. 즉 행정 소통의 노력이 실질적인 신뢰 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 거주자 및 고학력 집단에서 진주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이는 진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환류 체계의 미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그리고 협력적 분위기와 공동의사결정의 영역에서도 진주시 주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주시민들의 자율적, 실질적 참여 보장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3)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중립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의 조정, 시민 의견의 반영, 책임 수행 등 핵심 기능에 대한 결과가 ‘보통’에 집중되었음. 따라서 진주시의회가 향후 정책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의회 활동의 가시적 성과 및 참여에 대한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공유의 노력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음. 이는 진주시의회의 책임성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강하게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진주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신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 거버넌스 구조적 한계

(1) 참여 불균형

- 연령, 학력, 거주기간별 거버넌스의 참여 인식 차이가 발견됨. 청년층과 단기 거주자는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중장년층과 장기 거주자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경우 정책 과정에 대해 개방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수용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장기 거주자일수록 반복되는 참여 경험에서 오는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진주시의 거버넌스 체계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거나 제도적 설계가 일부 집단의 참여 동기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2) 의사소통 채널 부족

- 분석 결과 정보공유, 협력적 분위기, 신뢰 기반의 협의 등 모든 항목에서 응답이 중립적 수준에 머물렀음. 이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고학력 집단과 장기 거주자의 낮은 인식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결여와 환류 체계가 불충분하여 불신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함.

(3) 법·제도의 미비

- 분석결과 공동의사결정,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책임 공유의 노력 등 핵심적인 협력 관련 항목들이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렀고 집단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도 거의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 거버넌스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으며 공론화, 합의 도출, 책임 공유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공론화 위원회, 시민협의체 등)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을 잘 보여줌. 즉 진주시 거버넌스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협치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드러냄.

Ⅷ. 정책적 개선 방안

1. 시민참여 확대 방안

- 첫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함. 온라인 플랫폼, 공론화 위원회, 지역별 협의체 등 다층적 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순 일회성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례적 회의, 워크숍, 정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생활 속에서 제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민참여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 단순한 참여가 아닌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참여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2. 진주시의 역할 강화 방안

- 첫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맞춤형 홍보전략, 시민 친화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체감도를 제고해야 함.
- 둘째, 거버넌스 전담 조직의 운영이 요구됨. 기존 부서 간의 협업을 넘어서 거버넌스 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 협치 과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조례 및 지침을 정비하여 시민참여와 공동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시민참여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함. 공청회, 온라인의견수렴, 토론회, 숙의형 공론조사 등 다양한 참여 방식과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정책과 사업(예: 대형 환경시설, 도시개발계획 등)에는 의무적으로 시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즉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참여의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 효과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협력 거버넌스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해당 협의체의 구성 비율과 운영 방식, 의사결정 권한 등을 구체화하여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로 제도화해야 함.
- 또한 투명성과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수렴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그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책 추진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환류(feedback) 기능을 제도화해야 함.
- 한편, 실행력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제재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례에 따라 마련된 참여 절차를 진주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예: 시의회 보고 의무, 행정감사 대상 포함 등)을 명시해야 함. 만약 적극적으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서는 행정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3. 진주시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

- 첫째, 갈등 조정과 중재 역량 강화가 필요함. 진주시의회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협의체와 연계된 상설 협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진주시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회의록의 공개, 온라인 생중계, 시민 평가제 등을 통하여 진주시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를 통하여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진주시 거버넌스 분석 결과를 보면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갈등 조정, 시민 의견의 반영, 정책 결정에서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시민 다수의 응답자는 진주시의회가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보다는 제도적 기능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 공유 노력과 정책 방향 및 대안의 공동 논의 수준 항목에서는 주로 ‘보통 이하’ 응답에 집중되었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음.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및 협력자로서의 기능은 아직 뚜렷하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의회가 갈등 조정과 중재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갈등 조정과 중재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진주시 의회는 지역 내 주요한 갈등 사안(예: 환경시설 설치, 도시개발 등)에서 행정과 시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제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즉

시민들은 의회를 정책 갈등의 공론장이자 최종적인 합의 도출의 장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임.

- 갈등 조정과 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상설 협의 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진주시의회 내에 시민 참여형 협의체와 연계된 상설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갈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일회성 공청회가 아니라 지속적 협의가 가능할 것임.
- 의회의 중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진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중재, 협상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중재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주시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론화 절차의 의무화가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사업(예: 환경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통하여 진주시의회가 갈등 조정의 제도적인 책임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등 3자 구조의 운영이 필요함: 갈등 사안의 논의 시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와 시민단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세 주체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삼자 협의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대안으로 진주시의회는 단순한 심의·의결 기구를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는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성과가 환류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분석 결과, 시민들은 진주시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으며, 특히 고학력·장기 거주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두드러졌음.

- 이는 정보공개 부족과 의정활동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진주시의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회의록 및 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전체 회의록·영상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 상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민 친화적 플랫폼(유튜브 채널, 전용 웹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정책 반영률, 갈등 조정 성과, 시민 질의응답 충실도 등을 지표화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제안

- 첫째,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구조도를 설계해야 함.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제삼자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협치의 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를 위하여 실행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정보공개와 참여 경로의 확충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거버넌스 전담 조직의 운영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공동의사결정 체계를 내재화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진주시 거버넌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나 개별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구조도 설계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구조도 설계의 구체적 내용은 <표 52>와 같음.

<표 52> 진주시 형 협력 거버넌스 기본 방향 및 구조도

기본 방향		구조도	
1. 3자 균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 시민 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제도화. 	1. 최상위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시민 대표,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각 1/3 비율로 참여).
2. 분야별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복지, 청년 정책, 도시개발 등 주요 정책 영역별로 협력 거버넌스 협의체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2. 분야별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 복지 · 청년 · 지역경제 · 도시개발 등 분과별 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
3. 상설 거버넌스 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위원회가 아닌 상설 운영 조직(예: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 거버넌스가 정책 전 과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함. 	3. 실무 지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 내 거버넌스 전담 부서(예: 거버넌스지원과)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 및 조정.
		4. 환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논의 결과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구조.

○ 협력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면 <표 53>과 같음.

<표 53>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 단기(1-2년) - 기반 조성 단계	정보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개 정책자료,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시민 친화적 방식으로 제공
	참여 경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의견제출 시스템, 모바일 투표, 시민참여 앱 개발 등 ICT 기반 채널 확충 읍면동 단위의 시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방식 의제 발굴
	시범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소각장 문제)과 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협력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성과평가
2. 중기(3-5년) - 제도화 및 정착	거버넌스 전담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청 내 <거버넌스 지원과>를 신설하여 협력 체계 관리, 협의체 운영, 시민참여 지원을 전담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는 혼합형 조직운영
	의정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의 회의록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의정활동의 평가 지표 개발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의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의무적 개최
	제도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기본 조례> 제정: 협의체 설치, 운영 절차, 환류 체계, 의무 공개 조항 등을 규정 법적 기반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정권이나 기관장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 확보
3. 장기(5년 이상) - 내재화 및 확산 단계	협력 네트워크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 협력 거버넌스 절차를 내재화 주요한 도시개발, 환경정책 등 갈등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반드시 거버넌스 협의체를 거치도록 제도화
	공동의사결정 구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 구조를 정착 의사결정 결과와 책임을 세 주체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거버넌스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우수한 사례를 매뉴얼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

IX.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진주시의 주요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둘러싼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정책 갈등 사례로서 단순히 진주시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특히 2030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현실에서 소각장 설치에 불가피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의회의 견제,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중첩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 진주시, 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현행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정도를 분석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구조를 검토하여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특히 시민의 참여 정도, 진주시의 소통과 제도적 기반, 진주시의회의 갈등 조정과 대표성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 갈등 해소에 필요한 주체별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 대상은 진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설정하고, 층화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총 300명을 표본으로 확보하였음. 조사는 2025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원에 의해 현장에서 배포·회수하였음. 설문지는 총 8개 영역 33 문항(인식 관련 28문항, 응답자 특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 인식,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 이해당사자 간 신뢰, 참여, 공동의사결정 수준 등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통하여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간 신뢰와 협력 관계, 참여 경로, 갈등 조정 기능, 제도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였음.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는 진주시 소각장 설치 사업을 둘러싼 정책 갈등의 상황에서 협력 거버넌스가 어떠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 주체들의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적 대안 모색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진주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64.8%가 미인지로서 낮은 인지도를 보임. 소각장 설치의 지역적 영향은 긍정적 평가가 65%로 높지만, 정보접촉의 기회에 대해서는 54.9%가 거의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이는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음.
- 특히 장기간 거주자일수록 인지도 및 정보접촉의 수준이 높았고 읍면지역 시민들이 동지역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러나 고학력일수록 정보접촉은 낮았음. 이는 공식적 정보 전달 체계의 한계와 신뢰 부족과 연관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거주기간별 맞춤형 홍보 및 참여전략, ② 환경 안전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공개, ③ 지역 환원 대책 마련, ④ SNS·설명회·공청회 등 다채널 소통 전략이 필수적임.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긍정적 기대를 실제 정책 수용성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시민참여 관련 인식은 정책 참여 기회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긍정 13.9%), 시민참여가 관련 문제 해결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긍정 45.7%, 부정 22.7%). 시민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지만(보통 44.7%, 긍정 29.5%, 부정 25.8%), 대안 제시 역량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긍정 38.3%).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거주기간과 거주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단기·중간 거주자는 참여와 단체 활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장기 거주자는 참여 피로와 불신으로 인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읍·면 지역 시민이 동지역보다 시민단체의 기여와 대안 제시 역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읍면지역 ‘그렇다’ 48.5%)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가 향후 ①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 확대, ② 장기 거주자의 불신 해소를 위한 투명한 환류 체계의 구축, ③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량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 셋째, 진주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2.6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무름. 특히 시민 대상의 정보 제공은 긍정이 13.2%, 부정이 53.6%이며, 공식 소통 창구 운영은 긍정이 12.2%, 부정이 44.8%로 낮은 평가가 두드러져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 확보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은 긍정이 21.1%, 보통이 43.4%였으며 시민참여 제도 마련은 긍정이 20.7%, 보통이 46.8%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러 제도의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거주지, 거주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읍면지역은 평균 2.89점, 동지역은 2.60점으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10년 미만 거주자는 평균 2.92점으로 긍정

적이나 20-30년 거주자는 2.58점, 30년 이상도 2.57점으로 낮게 평가함. 이는 장기 거주자는 행정서비스의 좋지 못한 경험 누적으로 인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또한 고학력일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장기 거주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진주시의 역할 인식은 형식적 제도 마련에 머물러 있기에 실질적인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따라서 ① 정보제공의 접근성과 이해가능성 확대, ② 성별, 지역별, 거주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전략, ③ 장기 거주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환류 체계 강화가 정책적으로 요구됨.
- **넷째, 진주시의회의 역할 인식**은 갈등 조정,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시민 의견의 반영, 감시 및 견제 기능 등 모든 항목에서 절반가량이 ‘보통’ 수준에 집중되었음. 긍정 응답은 20% 내외에 머물러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뚜렷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갈등 조정 기능은 보통이 44.4%, 긍정이 19.7%,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은 보통이 49.2%, 긍정이 19.0%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읍면지역 거주자는 평균이 3.04로서 동지역 2.75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거주기간별로 10년 미만 거주자가 3.12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 2.66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음. 장기 거주자일수록 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학력이 높을수록, 중장년층일수록 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진주시의회의 역할은 전체 평균이 2.82점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에 가까운 인식을 보이거나 긍정적 체감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시사점으로는 ① 장기 거주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과 성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전반적으로 시민 인식이 중립적 수준에 있기에 의정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이 실제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참여의 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이해당사자 간 신뢰 수준은 전반적으로 43.1%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중립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상호신뢰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각각 21.7%, 22.4%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각 항목에 35% 내외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전체 평균은 2.82점으로 신뢰가 일정 부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공고하지는 않은 상태임.
- 성별, 거주지, 학력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연령과 거주기간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됨. 20대이하와 30대, 단기 거주자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40-50대 중장년층과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신뢰 수준이 낮아 세대 및 거주기간별 인식 격차가 발견됨. 고학력(대학원 졸) 집단은 비판적 태도가 강함.
- 위 결과는 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추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지속적인 소통 강화와 공식적 협의 채널 마련, ② 세대 및 거주기간별 맞춤형 소통 전략, ③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함.
- 여섯째,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 수준은 전체 평균 2.83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세부 항목별로도 자발적 참여(보통 40.7%, 긍정 26.1%, 부정 33.2%), 적극적 교류(보통 49.5%, 긍정 18.0%, 부정 32.5%), 공식 창구 마련(보통 52.5%, 긍정 16.9%, 부정 30.5%) 등에서 ‘보통’ 응답이 절반 내외로 가장 많아 참여가 제도적으로 존재하나 체감도와 실효성은 낮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20대 이하(2.96점)와 30대(3.06점)는 참여 수준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40·50대(2.65점 전후)는 낮아 세대별 인식 격차가 드러났음. 또한 대학원 졸 집단(2.43점)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뚜렷이 낮아,

고학력층일수록 제도적 참여의 한계에 비판적임. 거주기간에서는 10년 미만 거주자가 3.19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69점으로 가장 낮아 장기 거주자일수록 제도적 참여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음. 성별·거주지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 위 결과는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는 연결되지 못함을 보여줌. 시사점으로는 ① 청년층 및 단기 거주자의 높은 참여 의사를 제도화하여 지속적 참여로 정착유도, ② 중장년층 및 장기 거주자의 낮은 참여 인식개선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드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일곱째, 이해당사자 간 협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응답이 40-46% 내외로 가장 많아 중립적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공유, 협력적 분위기, 신뢰 기반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 모든 항목에서 일정 부분 협력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이고 제도화된 협력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세부 항목에서 정보공유는 긍정 19.6%, 부정이 37.6%, 협력 분위기는 긍정 20.3%, 부정이 34.3%, 신뢰 기반 소통의 노력은 긍정 22.7%, 부정이 31.2%,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긍정 19.6%, 부정이 39.0%로 나타나 모두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 응답이 많아 협력 기반이 취약함이 드러났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연령, 거주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20대 이하는 2.90점, 30대는 3.0점으로 협력 수준이 비교적 긍정적임. 40대는 2.73점, 50대 2.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세대별 인식 격차를 보임. 또한 10년 미만 거주자는 3.0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68점으로 가장 낮아 장기 거주자일수록 협력 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임. 성별, 거주지,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다만 대학원 졸업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은 협력 인식을 보여 제도적 협력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임.
- 시사점으로는 ① 청년층, 단기 거주자의 긍정적 협력 인식을 제도적으로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② 중장년

층, 장기 거주자 대상의 맞춤형 소통과 피드백 체계 강화를 통해 불신을 완화해야 함, ③ 고학력 집단을 위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참여 채널을 마련하여 협력 과정의 질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협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기에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협력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기됨.

- 여덟째, 이해당사자 간의 공동의사결정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응답이 45-51%로 가장 많았음. 이는 제도적으로는 일부 작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공고한 단계로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줌. 세부적으로 보면 분쟁 합의 도출 노력은 긍정과 부정이 각 26.1%, 공동의사결정의 실시는 긍정 23.4%, 부정이 25.5%임. 정책 방향 및 대안 공동 논의에서는 긍정 23.8%, 부정이 27.1%, 정책 결정의 책임 공유는 긍정 28.4%, 부정이 27.1%로서 모두 보통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여 중립적, 유보적 인식이 지배적임. 특히 책임 공유 항목은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거주지와 거주기간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임. 읍면지역 거주자는 3.15점으로 동지역 2.91점 보다 공동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10년 미만 거주자는 3.21점으로 가장 높으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2.85점으로 가장 낮음. 이는 단기 거주자는 제도적 참여와 공동결정에 기대를 보이나 장기 거주자는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어 부정적 인식을 보임. 성별, 연령, 학력 등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30대와 단기 거주자는 긍정적이며, 40-50대와 고학력 집단은 다소 비판적 태도를 보임.
- 시사점으로는 ①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공동결정의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② 분쟁 해결과 대안 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와 합의 형성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③ 청년층과 단기 거주자의 긍정적 경험을 제도적으로 확산하여 공동책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함.

- 진주시 거버넌스는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등 모두 참여와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는 참여율이 낮고 장기 거주자 및 고학력 집단은 제도적 피로와 불신이 누적되었고 대안 제시 역량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진주시는 정보제공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투명성의 부족과 환류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시민 체감도가 낮고 여전히 행정 주도적인 성격이 강함. 진주시의회에서도 갈등 조정, 시민 의견 반영, 책임성 확보 등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 구조적으로는 참여의 불균형, 의사소통 채널의 부족, 법과 제도의 미비가 한계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참여의 확대가 필요함. 온라인 플랫폼, 공론화 위원회, 지역 협의체 등 다층적 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정례화된 회의 및 환류 시스템을 통해 참여의 질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진주시는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조례 정비를 통하여 시민 참여 절차를 명문화하며 협력 기구의 설치와 환류 및 제재 장치를 제도화해야 함.
- 셋째, 진주시의회는 갈등 조정과 중재 역량의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시민,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3자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고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 공동의사결정의 내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진주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강인재·유태현. 2007. 지방정부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강황선. 2003.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01-227.
- 김석준 외. 2000. 「뉴거버넌스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김용웅. 200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와 전략. 국토연구원, 「국토」 236 : 14-21.
- 김정렬. 1999.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 21-39.
- 김진동. 2006.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진모. 2009.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사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임실 박사골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류한원. 201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 서울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전시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박영주. 2000. 뉴 거버넌스와 사회계약: 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4): 19-39.
- 박주현.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컬거버넌스 개념 측정을 중심으로-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박희봉. 2002.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정부행정」, 3 : 1-28.
- 사득환. 2007.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 153~173.
- 사득환. 2021.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53-2072.
- 소순창·유재열. 2005. 로컬 거버넌스로의 짧은 여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 299-319.
- 안태숙. 2011.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평호. 2018.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지방자치학과 지방자치

- 양현모·이준호·최유성·최진욱. 2007.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염일열·설성현. 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 오수길·이춘열. 2018.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2) : 125-158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36(4) : 321-338.
- 이미홍·김두환. 2007.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 213-237.
- 이병수·김일태. 2001.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 활동가들의 의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4(2) : 27-41.
- 이제학. 2008. 로컬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 도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대교 일반대학원
-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 217-236.
- 전영평. 2003.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모형 구축: 공익형 NGO의 형성정도와 정책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1(1) : 47-70.
- 전종섭. 2000. 시민사회의 뉴거버넌스. 서울: 법문문사.
- 주재복·한부영. 2006.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129.
- 주성수. 2001.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한국 NGO학회 2001년도 3월 학술발표회 논문집」
- 초의수. 2008. 지역사회복지의 로컬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4 : 1-26.
- 최병대. 2003. 함께 다스림(Governance)의 재조명: Local Governance의 의미와 서울시 시정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최영출. 2004.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지방행정연구」
- 최창현·사득환. 2004.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시민단체간 연결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 157-182.
- 한승준. 2004. 분권화시대의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8(5) : 281-302.
- 황선희. 2009.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안 -경기도

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x. 1998. Box, Richard C. (1998). Citizen Governance: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into the 21st Century. London: Sage Publications.
- Jessop. 2000. Governance Failure.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 11-32.
- Hilliard, Victor G. and Norman D. Kemp. 1999. Citizen Participation Crucial to Good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in South Africa, 18(3) : 40-67.
- Leach, Robert and Janie Percy-Smith. 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Palgrave.
- Lynn, Laurence E. Jr., Carolyn J. Heinrich, Carolyn J. Hill. 2000. Studying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Why? How?. *Governance and Performance: New Perspectives* : 1-33.
- Lynn, Laurence E. Jr., Carolyn J. Heinrich, Carolyn J. Hill. 2001.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Newman. 2001. Newman, J.. 2001. Modernis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 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s & Pierre. 1998.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 223-243.
- Peters G.. 2000.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Governance.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talizing the Public Service* : 29-57.
- Pierre, J.. 1999. Model of Urban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Urban Politics. *Urban Affairs Review*, 34(3) : 372-396.
-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 65-78.
- Rhodes, R.. 2000.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 345-363.
- Sa, Deughoan Il-Moon Choi. 2023. The Analysis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Governance: Focused on Community

- Development Project in Yangyang County.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 17-28.
- UNDP, 1996. Participatory Evaluation in Programmes Involving Governance Decentraliza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 Division. Revised 22.
- Waddock, Sandra A. 1989. Understanding Social Partnerships: An Evolutionary Model of Partnership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Society*, 21(1) : 78-100.
- 경남일보. 2025.1.2. 김해 광역 소각장 2026년 준공 순조.
- 경남매일. 2024.12.19. 김해, 버려질 쓰레기로 60억 벌었다.
- 경남도민일보. 2024.12.22.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60억 원 일궈낸 김해시 비결은?
- 김해시의회. 2018.10.5., 김해-창원 광역화 기본 협약 동의안.
- 노컷뉴스, 2018.10.5. 김해시의회, 김해-창원 소각장 기본 협약 동의안 처리
- 연합뉴스. 2024.7.16.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 해산, 7년 만에 활동 종료.
- 창원시의회. 2018.10.29. 제79회 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동의안’ 심사보고서.
- 한국경제, 2024.7.16. 반대 비대위, 항소 포기, 해산 발표.
- KBS 뉴스. 2025.06.12. 진주시 소각시설 독자 추진, 주민 반대 난관.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협력 거버넌스 체계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진주시의회 의뢰로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진주시, 진주시 의회의 역할 및 협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설문 응답에 대한 결과는 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향후 진주시의회의 정책적 대응 방향 수립과 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신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 8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병익

1. 다음은 진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진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소각장 설치 관련 언론보도나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시민참여 관련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진주시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가 관련 문제의 해결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이 문제의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시민단체는 소각장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진주시의 역할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진주시는 소각장 설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진주시는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진주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진주시는 시민참여제도(공청회, 위원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진주시 의회의 역할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진주시 의회는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진주시 의회는 소각장 설치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진주시 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진주시 의회는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의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5-1	진주시,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2	소각장 설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소각장 위치 결정과 관련 의사결정과정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의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3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의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진주시, 시민, 시민단체, 의회 등 거버넌스 주체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2	소각장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갈등 상황에서도 각 주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4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진주시,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공동의사결정**

의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설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진주시,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서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2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특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3	주요 참여 주체들이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4	참여 주체들은 관련 정책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나.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다. 귀하의 거주지는? ① 동지역 ② 읍면지역

라.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이하 ② 전문대 및 대학 재학 및 졸업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마. 귀하의 진주시 거주기간은?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③ 20-30년 ④ 30년 이상